

특별 간

다함께

2003년 1월 [20호]



30만 명이 외친

미국 반대

한국 대선 결과 / 반미 운동 분석 /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억압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DEMOCRATIC LABOR PARTY

STOP
THE WAR

DEMOCRATIC LABOR PARTY

PARTY

Don't
Attack

민주노동당

ISIS
ISIS

유와
저자

반대
현

미국에 대한 도전

조지 W 부시 정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제국주의적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시는 냉전 시절의 패턴마저 파기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은 선제 핵 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주도한 여론 조사(‘2002 세계인의 생각’)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시의 이라크 전쟁 동기에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불신은 미국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이미지가 모든 나라에서 손상됐다 — 나토 동맹국, 개발도상국, 동유럽, 가장 극적으로는 이슬람 국가 등에서 그랬다.”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국민의 ‘압도다수’가 무력을 사용해 사담 후세인을 전복하려는 부시의 계획을 반대한다. 러시아에서는 79퍼센트가, 프랑스에서는 64퍼센트가, 독일에서는 71퍼센트가 반대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나토 동맹국인 터키인들 가운데 다수가 미국에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터키인들은 이라크 전쟁이 소위 사담의 ‘위협’과 아무 관련 없다고 믿는다. 40퍼센트는 미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국민도 국제적 반미·반전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12월 7일과 14일 반미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했다. 운동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미’가 중요한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문화일보>(12월 12일치) 여론 조사를 보면, 65.3퍼센트가 반미 시위와 SOFA 개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동안 반미는 주로 좌파의 의제였다.

운동의 압력 때문에 친미 우파 정치인인 이회창조차 반미 시위를 지지하는 시늉을 해야 했다. <월간 조선> 편집장인 조갑제는 이를 두고 “자해적 선거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회창이 반미 시위를 비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나마나 거대한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한나라당 내 냉전 전사들은 이회창 후보가 발언 수위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호소력을 넓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다.”(<타임> 12월 9일치.)

반면,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던 노무현은 보수파들의 눈치를 보느라 반미 시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부시 사과 촉구 서명도 거부했다.

최근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퍼센트가 더는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정서는 주한 미군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 지배자들은 반미 운동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발전할까 봐 몸서리친다. 12월 9일에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은 반미 시위에 대해 “[친북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직적 확산”이라고 비난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를 뒤에 부시는 미사일을 싣고 향해하던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부시와 남한 우파들의 반격은 14일 대규모 반미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전국에서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31일에 대규모 반미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 시위는 머지 않아 벌어질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목차

- 3 편집자 머리말
- 4 반미 운동 분석
- 7 운동과 정당
- 8 두 개의 미국
- 10 불량국가
- 13 미국의 불평등
- 16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을까?
- 19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21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32 한국 대선 결과
- 34 노무현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
- 35 경제자유구역법
- 36 북한 핵 논란
- 38 유엔 무기사찰단의 행적
- 40 12년 전의 걸프전
- 42 새로운 세계 불황
- 46 베네수엘라
- 47 이스라엘 조기 총선
- 48 이주 노동자 대책 비판
- 50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시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6-4773

Fax : 02-968-5907

E-mail : altogether2002@ycoos.co.kr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1월 8일입니다.

E-mail : altogetheredit@ycoos.co.kr

정치적 전환점

김인식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달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역사는 수십, 수백 년 세월을 기록하기 위해 연대기순으로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따금 어떤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의 반WTO 투쟁이 그랬다. 이 나라에서는 12월 7일과 14일 반미 촛불 시위가 그런 경우다.

이 시위는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지난해 9·11 이후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미·반전 운동에 한국도 가세했다. 우리는 새로운 운동의 등장을 보고 있다.

두 시위는 남한 반미 투쟁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12월 7일 시위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14일에는 서울에서만 5~6만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면서 시위대는 더욱 늘었다. 전국적에서 대략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뭉개 죽인 미군에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항의했다.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은 '반미' 운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이 운동은 미군의 두 여중생 살해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다. 운동의 즉각적 요구도 주되게 이 점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중적 반미 시위의 위대한 승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올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이 반미 시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중적 저항이 분출하자 '반미'는 운동에 겹을 집어 먹은 언론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가 됐다. 아마 그들은 다른 적절

한 표현이 있었다면 '반미'라는 선행적 단어

를 피했을 것이다. 냉전 시절에 정부는 '반미'를 '용공', '친북'이라고 비난했다. 권력자들의 사전에서는 다른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반미'는 시위대 스스로 사용하는 용어였다.

대규모 반미 시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운동은 1990년대 중엽부터 고양되기 시작한 계급 투쟁의 일부다. 노동자 운동이 계급 투쟁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1996년 연말에서 1997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 '노동법' 파업이 분수령이었다. 대중 파업의 영향으로 34년 일당 독재가 막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1997년 IMF 경제 공황은 파업과 대중 시위 못지 않게 노동 계급의 의식을 바꿔 놓았다. 노동 계급은 IMF 경제 공황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경험했다.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는 신자유주의와 경제 세계화를 미국이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라는 전통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도전받기 시작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RC)가 발표한 '2002 세계인의 생각' 보고서를 보면, 비이슬람권 국가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두 나라였다.

IMF 경제 공황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면, 조지 W 부시의 대북 강경 물이 대중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킨 데다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악의 축' 국가들에 선

제 핵 공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미국이 고압적이고 둔감하며, 특히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그렇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미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뉴욕 타임스> 12월 8일치).

미국의 군사적 패권 야욕 때문에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러다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상당수 한국인들이 미국의 전쟁 물의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PR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72퍼센트가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했다. 73퍼센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방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반미 시위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의 일부다. 실제 반미 시위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았다. 12월 7일 시위에서 촛불 시위 최초 제안자는 “‘세계 시민’인 우리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효순이, 미선이 같은 아이들이 1백만 명씩 죽어 가는 것을 슬퍼해야 한다”고 말해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14일 시위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대중적 저항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분노가 3만 7천 명의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해 온 좌파 학생들의 범주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뉴욕타임스> 12월 8일치.)

남한의 반미 운동은 종종 주한 미군을 반대하는 형태를 취한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이 나라의 조건, 특히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강요한 분단과 전쟁 경험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오만하게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에서 공공연히 자신들의 정치적 비준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시내 중심가의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거대한 부지에 머물고 있

어 한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러 유럽인들도 미국인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한국을 ‘미국의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프랑크푸르트 알레마이에 자이퉁> 12월 3일치.)

미국 김대중, 노동 계급

최근의 반미 시위는 대중의 심오한 정치적 각성만큼이나 새로운 특징들을 보여 줬다.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대중의 자생성이다. 시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안티조선 활동가, 종교인,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부부, 연인, 좌파 활동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시위대의 압도 다수는 젊은이들이었다.

12월 7일 시위 때도 대중의 자생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있었다. 사회자가 “14일 집회가 있으니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자”고 제안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미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경찰도 시위대의 규모와 기세에 놀려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

운동이 이토록 거대하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놀라운 성과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여섯 달 가까이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운동을 건설해 온 좌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정치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친미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이 전국비상시국회의에 참가했는데도 한나라당 비판을 삼간 것이 그런 경우다.

반미 시위 현장의 지배적 분위기는 미국에 대한 즉각적 분노였다. 당연하게도, 시위 참가자들의 의식은 매우 모순돼 있다. ‘대한민국’을 외치거나 태극기를 몸에 두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운동이 SOFA 개정이나 부시 사과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주한 미군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 처음으로 정치 활동에 입문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섞여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좌파는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운동의 전진을 위한 논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논쟁은 이렇다 : 미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김대중의 친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하는가? 노동 계급은 단지 국민의 일부인가 아니면 운동의 성패를 가를 핵심 세력인가?

반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투쟁의 표적을 미국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미 시위대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한국 경찰이다. 김대중은 '반미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친미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한국 지배 계급이 미군 주둔에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이렇게 말했다.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한국 지배 계급]가 오늘날 살아남아 이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김대중 비판에 인색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반미 운동은 국내 지배 계급에 맞서는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계급 협력적(민족 대단결) 방식으로는 미국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이것은 반미 시위가 계급 투쟁적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조직 노동 계급의 동원이 필수적이다. 노동 계급 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건설하기 어렵다. 그런 운동은 로켓트처럼 솟아 올랐다 나무토막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의 운동을 1987년 6월 항쟁에 비유한다. 그러나 6월 항쟁은 운동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일부 지역(부산, 성남 등)에서는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했다. '제2의 6월 항쟁'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리 되면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더한층 높아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반미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면 장차 벌어질 경제 투쟁(3대 악법 철폐 투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거리의 활력은 경제적 조건 개선 투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7~9월 노동자 대파업으로 이어졌다.

운동과 정당

이런 주장들은 불가피하게 조직된 정치 조직이 필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특히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저항하는 운동은 하나의 슬로건이나 불안정한 연합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효과적인 운동을 건설하려면 지도력, 전략, 조직 중핵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수 시위 참가자들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물론 한나라당 같은 보수 정당들이 운동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순전히 선거를 의식해 운동을 지지하는 척하는 보수 정당들이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조직(정당) 문제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문제를 다른 형태로 뒤돌릴 뿐이다. 서구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봤듯이, 반자본주의 정서의 수혜자는 처음에 우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었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반보수당 분위기 덕분에 승리했다. 1995년 12월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의 논리는 조스팽이 이끄는 사회당의 정책과는 달랐지만 파업의 정치적 수혜자는 사회당이였다.

운동 내 활동가들은 정치적 지도력을 창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 운동이 올바른 정치적 표현을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을 거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정치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반미 운동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운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은 첨예한 정치적 논쟁을 수반할 것이다. 정치를 기각하는 운동주의는 미국과 보수 정당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이론과 전술을 제시할 수 없다.

전망

12월 10일에 부시는 미사일을 싣고 항해하던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14일 대규모 반미 시위와 19일 대선을 겨냥

한 것이었다. 오유진 씨가 이 잡지의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상기시켜 주한 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우파를 돕는 한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를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14일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대로 벌어짐으로 써 반미 운동은 첫 고비를 넘긴 듯하다. 그러나 미국과 우파들

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미국의 반격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더욱 격렬한 충돌을 낳을 것이다.

새로운 운동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는 냄비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31일 시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롭고 거대하고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은 운동에 장애가 되는가?

김인식

많은 사람들은 기성(보수) 정당들을 무척 혐오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거짓말이나 일삼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대기업과 부자들의 이익만을 뻘뻘스럽게 옹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성 정당들에 넋두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기성 정당에 대한 거부감은 미군의 두 여중생 살해 항의 운동에서도 나타났다. 옹케도, 시위 참가자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이 운동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했다. 12월 7일 광화문 촛불 시위 때 한나라당 유세 차량이 보이자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고 돌병을 던졌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정치 조직과 정당들을 의심하기도 한다.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제나 목적에 운동을 종속시키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시위 참가조차 경계한다.

기성 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6월 13일 두 여중생이 살해당한 직후부터 항의 운동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40명이 넘는 당원들이 구속됐다.

그럼에도 지금껏 보수 정당만을 경험한 지라 많은 사람들이 정당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 이를테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되 지도자는 없는 — 운동

을 건설하고 싶어한다.

모름지기 모든 운동은 그 안에서 상이하거나 상반되는 견해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이런 논쟁에서 한쪽 견해를 편들게 된다.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간판을 거부할 때조차 논쟁 주위로 이끌린다.

12월 7일 광화문 촛불 시위 때 미 대사관으로 행진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사회자는 이쯤에서 집회를 정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미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자고 주장했다. 2만 명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미 대사관으로 행진했다.

모든 운동에서 정치가 제기된다. 어떤 전술을 채택할 것인지, 주류 정치인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에 호소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치가 제기된다.

이런 정치적 논쟁들 속에서 운동이 전진하려면 조직과 정당이 필요하다. 조직은 성공적인 운동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채택해서는 안 될 전술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정치"를 소수 지도자들이 수동적인 대중에게 하사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견해를 거부하는 것은 옳바르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쟁점을 토론하고 사상을 명료히 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운동이 발전하는 데서 사상은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사상은 운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반면, 어떤 사상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예컨대, 여중생 살해 항의 운동에는 기성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상식"적인 사상을 펴뜨리며 이 운동이 될수록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또, 상당수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을 외친다. 그리 되면 운동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와 경찰에 도전하기 어렵다.

이런 사상들에 도전하려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동적인 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론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상적 오류는 전술적 오류만큼이나 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변혁적 정치 조직이나 정당은 운동 그 자체는 아니고 운동의 일부다. 수많은 활동가들의 행동과 거대한 저항에서 고무를 받는 운동의 일부다. 그리고 운동이 전진하기를 바란다.

이런 조직은 투쟁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대다수 노동 계급의 자기 행동이 조직의 토대다.

창의적인 투쟁 방식과 단단한 조직은 상호 보완적이다. 거대한 사회 운동의 탄생은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커다랄게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 변혁적 조직과 정당이 더 거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면 세력 관계를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기회 또한 더한층 커지게 된다.

이것이 사회 변혁적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두 개의 미국

이수현

[편집자 주] 여중생 살해 혐의 투쟁이 폭발하면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감정은 미국의 모든 것, 모든 미국인을 거부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미국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미국은 엄청난 빈부 격차, 인종 차별, 노동자 탄압 등 내부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다.

1996년 클린턴은 복지 “개혁”을 단행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했다. 지금 일리노이 주 펜브로크 군에 사는 라세어와 그의 다섯 아이들은 식량 배급표로 한 달에 4백50달러(약 55만 원)를 받는다. 라세어는 끼니를 걸러 가며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타이코(한국의 캡스를 인수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회사)의 전 회장 테니스 코조우스키는 개 모양의 우산꽃이를 사는 데 1만 5천달러(약 1천8백만 원)나 썼다. 물론, 그에게는 “껌값”일 뿐이었다. 지난해 그는 자기 처를 위해 연 호화 생일 파티에 1백만 달러(약 12억 7백만 원) 넘게 쓰기도 했다.

지난 9월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1년 미국의 빈곤층은 거의 3천3백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1.7퍼센트가 빈곤층인 것이다. 그 중에서 1천1백70만 명이 어린이들이다.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 20퍼센트의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평균 1천 달러 증가했다. 그들은 전체 가계소득의 절반을 가져갔다.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빈곤층은 전체 가계소득의 3.5퍼센트만을 가져갔다.

2001년 말 미국 기업 최고 경영진의 평균 연봉은 1천45만 달러(약 1백25억 원)였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 임금의 4백10배, 육체 노동자보다 5백31배 많은 액수다. 빌 게이츠는 1억 달러(약 1천2백7억 원)짜리 집을 새로 샀다. 그는 자동차 30대가 들어가는 차고에 무슨 차를 넣을까 고민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사형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 집행국이다.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올해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지금도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가 3천 명이 넘는다. 사형이 합

법인 38개 주 가운데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곳은 조지 W 부시가 주지사를 지낸 텍사스다. 1977년 이후 집행된 8백여 건의 사형 중 2백86건이 텍사스 주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사형 관련 국제협약도 무시한다. 국제인권 협약에 따라 금지된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형이 1993년 이후 16건이나 있었다. 세계 전체(24건)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 사형수가 1백 명에 이를 만큼 오심도 많다. 빈부 격차와 인종 차별에 따른 불공정 재판도 끊이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공범 관계인 사건에서 부자는 징역형, 가난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한다.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사형수 비율은 인종별 인구 구성비를 크게 웃돈다. 1977년 이후 살인 피해자의 절반은 흑인이었다. 그러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80퍼센트가 백인이 피해자인 경우였다. 사형수의 95퍼센트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인종 차별은 악명 높다. 특히 경찰과 공무원들의 흑인 차별과 억압이 두드러진다. 이런 인종 차별과 억압 때문에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은 LA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거리·공항 등지에서 사람들을 검문할 때 인종을 단서로 이용한다.

미국은 공공 의료보험이 아예 없는 나라다.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국민소득의 14퍼센트나 된다. 그래서 인구의 18퍼센트인 5천만 명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다.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은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의료보험에 들었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노동자들도 우리 나라 노동자처럼 탄압받는다. 지난 여름 서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그 곳의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1999년 이후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가 7명이나 됐다. 게다가 새로운 기계 도입으로 대량 해고 위협이 닥쳤다.

태업으로 시작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업주는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그러자 부시는 전시 상태에나 적용되는 미국관 노동악법 테프트-하틀리 법을 적용해

해 해상운송보안법을 95대 0으로 통과시켰다. 그 법은 전국의 항구들을 군사화하고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국민들을 독가스로 살해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보다 훨씬 먼저 자국 국민들에게 독가스를 사용했다. 미국 국방부 문서를 보면,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군부는 알래스카, 하와이, 메릴랜드, 플로리다에서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했다. 그런 생화학 무기 중에는 VX, 사린, 소만, 타분 같은 신경 가스나 탄저균 같

80일 동안 파업을 금지시켰다.

부시는 집권 당시 항공사 파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정비사들이 파업을 벌이자 이것을 재빨리 금지시켰다. 그는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체공학적인 기준들을 새로 마련하려는 방안도 취소했다.

부시는 9·11 사건 당시 구호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영웅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9·11 사건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항공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시가 내놓은 긴급 대출 보증 계획은 노동조합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기득권' 반환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미국 경찰관들이 십대 소년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집단 구타하고 있다.

은 생물 무기도 있었다.

이렇듯 두 개의 미국이 있다.

존슨, 닉슨, 키신저, B-52 폭격기,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 등으로 상징되는 미국, “악의 제국” 미국이 있다. 그 미국은 세계 각지의 독재자들을 후원한다. 엄청난 불평등, 빈곤, 억압은 외면한 채 부패한 친미 정권들만 두둔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고문·테러도 마다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을 강점한 채 야만적인 학살과 탄압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무기와 돈을 대준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도 있다. 지난 10월 6일 미국 전역의 36개 도시에서는 10만여 명이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26일 벌어진 전국 만전 시위에는 약 20만 명이 참가했다.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 전쟁을 미국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 미국의 청년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반대해 집영장을 불태우고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고향에 돌아와 만전 시위에 가담했다. 흑인들은 인종 차별과 억압에 반대해 게토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동성애자들은 스톤월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 시위에서 미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운동가들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들은 “또 다른 미국”을 보여 준다.

우리는 바로 이 또 다른 미국 편이다. “또 다른 미국”은 “악의 제국”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노조 파괴”

부시는 최근 17만여 명을 거느리게 될 공룡 부서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면서도 연방 정부 일자리 85만 개를 아웃소싱(자체 인력이나 설비를 이용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는 것)하겠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 지도자 톰 대슬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백악관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국토 안보가 아니라 노조 파괴다.”

그러나 부시의 앞길을 닦아 준 사람은 바로 민주당의 앨 고어였다. 그는 부통령 재직 시절 37만 7천 개의 연방 정부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 혁신” 방안을 추진했다. 그리고 부시가 기업화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과 결탁

불량국가

존 필저
다큐멘터리 제작자
저널리스트

1백1일 동안 영국 해병대는 미국의 용병으로 무의미한 작전에 참가해 왔다. 이제 무법자 미국은 세계의 주요 불량국가라는 자격을 획득했다.

실체도 없는 적과 전투를 벌이고 가끔은 부족민들에게 총을 쏘 대고 흙더미를 폭파하고 언론을 위해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해병대가 한 수치스런 것의 일부였다. 이것은 블레어 정부가 강요한 것이었다. 블레어 정부가 부시 일당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공모하는 것은 제국의 신화를 패러디한 것이 됐다.

부시 일당을 폭력배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내 사전에 폭력배는 “범죄나 나쁜 짓을 저지르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나와 있다. 그 말은 조지 W 부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또, 부시의 연설문을 써 주고 그의 결정을 도와 주고 부시 집권 후 국제법의 기초 자체를 허물어뜨린 사람들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저지른 짓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월요일[2002년 7월 1일] 결혼식장에서 하객 약 40명을 살해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격·폭격 먼저, 수색 나중”이라는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9·11 몇 주 뒤에 조지 W 부시는 그렇게 발표했다.

미국 지상군이 존재하지 않고 영국 해병대 같은 “동맹”군이 그들을 대신하

는 한, 가난한 나라들을 깨부수는 미국 군사 기구의 구실은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영제국의 전성기에 인도와 그 밖의 다른 식민지에 주둔한 영국 군대도 비슷한 구실을 했다. 물론, 미국인들과 달리 영국인들은 자국 병사들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었지만 말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들은 미국 비행기들이 “너무 작아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마을들을 파괴해 하루밤에 “3백 명 넘게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인디펜던트>의 리처드 로이드 페리는 일가 4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소년 하나와 그 할머니뿐이라고 보도했다.

TV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뉴햄프셔 대학교가 조사한 것을 보면, “10월 7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미국의 폭격으로 적어도 3천7백67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하루 평균 62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은 셈이다.” 지금은 민간인 5천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9·11 때 죽은 사람의 거의 두 배다.

알 카에다 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잡혔다거나 죽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탈레반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와 탈레반 집권 전의 살인적인 봉건주의와 비교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

수도인 카불에는 외관상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감히 베일을 벗지 못한다. 미국이 세운 새 정권의 법무장관은 “탈레

반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홀 동안 거리에 매달아 놓곤 했지만, 우리는 공개 처형 뒤에 아주 잠깐만, 예컨대 15분 정도만 매달아 놓을 작정이다.” 하고 말했다.

이것을 부시 말처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라고 묘사하는 것은 1940년에 독일의 전쟁 기구는 우수했다고 칭송하면서 나치를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병대뿐 아니라 영국의 언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워싱턴과 화이트홀[런던의 관청 소재지]은 모두 오래 전부터 알 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복이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미국인들은 국내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군벌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군벌들이 고통받는 자국민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데도 말이다.

10월에 미국의 계획은 파슈툰족이 지배하는 정권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파슈툰족이 탈레반을 저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탈레반의 내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그 뒤 미국인들은 전술을 바꿔 타지크족과 우즈베크족 군벌들의 “연합”을 결성하려 했다. 현재의 “임시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비록 파슈툰족이지만 자기 부족 내에도 기반이 없고 군대 내에도 기반이 전혀 없다. 그는 그냥 미국의 앞잡이일 뿐이다.

이른바 “국제 안보 지원군”을 주도하는 영국 해병대의 주둔은 여러 가지 이유로 19세기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영국 해병대는 미국인들의 뜻을 받들어 [서방에] 우호적인 군벌들이 서로 상대의 목을 찌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영국 해병대는 미국의 석유와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그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을

2002년 7월 1일 아프가니스탄 결혼식장 폭격으로 부상당한 어린이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은 심각한 곤경에 빠진 미국 경제와 부시 정부에게 아주 중요하다. 부시 정부를 좌우하는 것은 석유 산업의 이익이다. 특히, 부시 집안 자체가 그렇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아시아 타임스>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복잡한 카스피해 연안의 파이프라인 망”을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다.

부시에게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낸 회사 중 하나인 엔론은 카스피해 연안에 25억 달러 상당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 부통령 체니를 포함해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은 “모두 석유 회사들을 대신해 직접·간접으로 중요한 거래들을 해 왔다”고 <아시아 타임스>는 보도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그 지역에 건설된 미군 기지들을 지도에서 찾아 보면 당장 눈에 띄는 사실은 그것이 인도양으로 빠지는 송유관 건설 노선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블레어와 때버리 제프리 훈[영국 국방장관]은 이 결정적인 정보를 영국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 미국의 제국주의 게임에 돌아나고 있는 영국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에겐 다행히도 영국 군대는 단지 북통과 독감만 얻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밀밭에서 자던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하는 체계적인 살인 방식에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네 시간 동안 그 밀밭과 마을에 총탄과 로켓탄을 퍼붓던 미군 헬기들이 착륙하자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 생존자들을 사살하고 다른 “용의자들”을 억류했다.

사실, 그 지역은 탈레반에 반대한 것으로 유명했고 우루즈간주의 주지사는 죽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거기에 알 카에다나 탈레반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이라는 불량국가는 교토 협약을 파기했다. 교토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환경 재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선제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방해하려 했다. 미국의 군 장성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피고석에 설 수도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그럴 만도 했다.

이스라엘은 예년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스라엘이 유엔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입을 봉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엔의 권위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들이 선출한 지도자를 제거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식량정상회의도 무시했다.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원조, 즉 깨끗한 물이나 전기 등의 원조를 봉쇄했다. 미국의 식량 보조금을 80퍼센트 증가시키자는 제안은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었다.(세계 최대의 식량 회사인 카

길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을 때, 그들이 먹는

것의 대부분—시리얼, 빵, 커

피, 설탕 등등—은 우리

회사를 거쳐 나온 것

들이다.”

카길의 목표는 5~7년마다 회사 규모를 두 배로 키운다는 것이다.)

미국의 불량한 행동에는 대부분 절박한 초조함 같은 것이 배어 있다. 워싱턴을 운영하는 “자유시장”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3백40억 달러(약 40조 9천3백60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액수의 미국 국채 매입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심각하게 고평가된 상태며 달러화 가치도 불안하다.

어떤 평론가가 썼듯이, “부시 독트린”은 “미국 독점 자본의 요구 위주로 세계 질서를 짜려는 마지막 시도”인 듯하다. “그것은 미국 독점 자본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석유와 화석 연료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라크를 공격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세계 2위의 석유 자원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적 도전자 중국을 미군 기지들로 포위하려는 것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약화시킴으로써 주요 경제적 경쟁자 유럽의 지도자들을 위협하려는 것이고 무역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미국에 다녀왔다. 많은 미국인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생각은 미국의 주류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주류 언론은 자기 검열과 통제를 하고 있다. 아마도 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로새머가 밝힌 것처럼 오히려 분위기는 어두웠다. 그는 “일방주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라면서, 향후 50년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미국 이외의 어느 나라 시민들도 핵 공격이나 환경 파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세계, “민주주의”의 혜택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세계, 미국의 “이익”에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은 곧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혀 감시와 억압을

당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계. 그런 불

량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단 하나

의 길이 있다. 그것은 긴급

하게, 기탄없이 발언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자가 말하는 미국의 불평등

폴 크루그먼

《우울한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부키),
《불황경제학》
(세종서적)의 저자

이 글은 <더 뉴욕 타임스 매거진> 2002년 10월 20일치에 실린 글을 요약한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 1950년대와 1960년대 — 미국은 실제로나 느낌으로나 중간계급의 사회였다. 황금시대[1920년대 — 50년대]의 소득과 부의 엄청난 불평등은 사라진 상태였다. 물론 하층계급은 가난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식적인 지혜에 따르면, 그것은 경제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였다. 물론 일부 부유한 기업인들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은 보통의 미국인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저택을 지은 줄부들과는 다른 방식의 부자였고, 그 수도 별로 많지 않았다. 부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큰소리 치던 시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먼 옛날처럼 보였다.

미국에서 빈부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부자의 생활 스타일을 힐끗 보았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 마음 속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입과 부의 분배에서 생기는 급격한 변화가 분명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간에 차이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거의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화제를 끌어내기만 해도 “계급 전쟁”이나 “시댁의 정치” 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빈부 격차의 심각한 경제·사회·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나타난 엄청난 불평등 증가의 정도, 그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특히 극소수에게 소득과 부가 놀랄 만큼 집중된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기업 스캔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회색 모직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제왕적인 CEO에게 밀려났는지를 알아야 한다. 최상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미국이 이런 경제적 성취에도,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빈곤이 증대하고 수명이 낮아진 주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부의 편중은 우리의 정치 체도를 다시 만들고 있다. 우리 정치의 우경화와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황금시대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멀리서와 같은 분노

는 없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전 CEO 잭 웰치의 지저분한 이혼 소송은 뜻밖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보통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던 기업 엘리트들의 특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웰치가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맨하탄의 아파트 종신 이용권(음식, 와인, 세탁 포함), 회사 제트기 이용권, 기타 다양한 현물 혜택 등은 적어도 1년에 2백만 달러(약 23억 9천1백6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특혜를 보면 현재 기업 지도자들이 구제제[프랑스 혁명 전의 시대 — 50년대]의 특권 계급 같은 대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측면에서 이 특혜들은 웰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경영하던 마지막 해, 즉 2000년에 웰치는 주로 주식과 스톡옵션으로 1억 2천3백만 달러(약 1천4백71억 원)를 받았다.

미국 대기업의 CEO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이 뉴스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보통 노동자들보다 많은 돈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한 세대 전의 기업 회장들이 받던 액수와 오늘날 이들이 받는 액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지난 30년간 대부분 사람들의 봉급은 약간 올랐을 뿐이다. 미국의 평균 연봉은, 1998년 달러(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정치)로 환산해서, 1970년의 3만 2천5백 22달러(약 3천8백89만 원)에서 1999년 3만 5천8백64달러(약 4천2백89만 원)로 상승했다. 즉, 29년 동안 약 10퍼센트가 상승한 것이다. 오르긴 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포춘>의 보도를 보면, 같은 기간 최상위 CEO 1백 명의 실질 연봉은 1백30만 달러(약 15억 5천4백54만 원) — 평균 노동자의 39배 — 에서 3천7백50만 달러(약 4백 48억 4천2백50만 원) — 평균 노동자의 1천 배 이상 — 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간 CEO 봉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자체로도 놀랍고 중요한 이야기거리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득과 부의 재집중이라는 더 큰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일 뿐이다. 부자들은 항상 여러분이나 나와는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해 봐도 훨씬 더 달라졌다. 말하자면, 지금 그들은 스캇 피츠 제럴드가 유명한 말을 했을 때[대공황 직전 — 50년

이] 만 큼 이 나 우 리 와 다 르 다.

이것은 논쟁적 주장이지만, 사실 전혀 논쟁적일 필요가 없다. 적어도 지난 15년 간 미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부정하기 힘들다. 인구 조사는 상위 20퍼센트의 가정, 그 중에서도 특히 최상층 5퍼센트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중간층 가정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도 이 증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호황 산업이 돼 버렸다. 보수파 논객들은 이 통계 수치, 방법론, 분명한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의 동기를 믿을 수 없게 만들려는 수십 건의 연구들을 쏟아 냈다.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들은 신문 사설란에서 특별 대접을 받았고, 우파 성향의 정부 관료들이 자주 인용하는 자료가 됐다. 4년 전 앨런 그린스펀(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가 비당파적이라고 생각했을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국의 중앙 은행 — 옴니이]의 연례 잭슨 홀 모임의 기조 연설에서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실제로 증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불평등의 증가를 부정하려는 단합된 노력 자체가 떠오르는 금권 정치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징후다. 그리고 불평등은 문제가 아니라거나 더 심하게는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MSO)의 최고 경영자이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사 — 옴니이]식 문장을 따와서 그것은 좋

은 일이라는 견해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마찬가지로 징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정치적 동기가 있는 연막 전술을 걷어 내고 나면 불평등 증가라는 현실은 의심할 수 없다. 사실, 인구 조사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높은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예컨대, 이런 통계들이 CEO 급여의 폭발적 증가를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증거들은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상위로 갈수록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도 보여 준다. 즉, 상위 20퍼센트 가정이 중산층 비슷한 가정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 아니다. 최상층 5퍼센트는 그 다음 15퍼센트보다 더 많이 벌고, 최상층 1퍼센트는 그 다음 4퍼센트보다 더 많이 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반복된다.

따라서 우리가 두번째 황금시대에 들어섰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미국에서 중간계급의 시기, 즉 대저택과 요트를 소유한 계급들의 시기는 지나갔다. 피케티와 새즈의 연구 결과를 보면, 1970년에 최상층 납세자 0.01퍼센트가 총 소득의 0.7퍼센트를 차지했다. 즉, 평균보다 “겨우” 70배 더 벌었을 뿐이며, 초호화주택을 소유하거나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에 최상층 0.01퍼센트는 총소득의 3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이것은 최고 부유층 1만 3천 가정이 2

천만 가정의 빈곤층만큼 소득을 올렸다는 뜻이다. 이들 1만 3천 가정이 보통 가정보다 3백 배나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뉴딜의 영향을 지우기

증대하는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일부 — 전체는 아니다 — 경제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호하다고 여겼을 가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관점은 불평등에 한계를 정할 때 사회 규범이 하는 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뉴딜은 뉴딜을 가장 열렬하게 찬양하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요한 영향을 미국 사회에 남겼다. 뉴딜은 30년 넘게 지속된 급여의 상대적 평등이라는 규범을 만들어 냈으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광범한 중간계급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규범들은 1970년대 들어서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실의 부정부패는 잠시 제쳐 두고, 30년 전 비교적 많지 않던 최고 경영자들의 봉급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지 알아 보자.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순수한 경제학보다는 규범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좀더 낙관적인 이야기는 CEO 급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자유계약제도 [한국에서 ‘연봉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 — 옮긴이]의 도입 후 야구 선수 연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봉급을 받는 CEO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좀더 비관적인 관점 — 내가 보기엔 더 그럴듯하다 — 에서는 재능 경쟁은 사소한 요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맞다, 위대한 경영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성과가 그저 그런 경영자도 엄청난 봉급을 받았다. 경영자들이 많이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많은 특혜를 관리하는 회사 이사진을 자신들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소득을 그토록 천문학적으로 늘린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회의실의 보이지 않는 악수였던 것이다.

불평등의 대가

첫째, 총소득에서 부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더는 작지 않다. 요즘 1퍼센트 가정의 소득은 세전 총소득의 약 16퍼센트, 세후 소득의 약 14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지난 30년 간 대략 두 배로 늘어 이제는 하위 40퍼센트의 몫과 맞먹는다. 이것은 소득이 상층으로 거대하게 이전했음을 뜻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덜 부유한 가정의 소득이 평균보다 눈에 띄게 천천히 상승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수정한 평균 가계 소득 — 총소득을 총 가정 수로 나눈 것 — 은 28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중간 가계 소득 — 소득 분배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계의 소득, 전형적인 미국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더 잘 보여 주는 지수 — 은 단지 10퍼센트만 증가했다. 그리고 최하위 5퍼센트 가정의 수입은 실제로 약간 하락했다.

이 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가 우리의 경제 성장 기록을 자랑스럽게 여겨 온 것은 상당히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간 이 성장의 성과 중 극히 작은 부분만이 보통 가정들에 돌아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중간 가계 소득은 해마다 겨우 약 0.5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증가마저도 아내들의 장시간 노동 때문이지 실질 임금의 증가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소득 관련 수치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살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증대를 반영하지 않는다. 제너럴 모터스가 사내에서 제너러스(generous : 인심 좋은) 모터스로 불리던 시절,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꽤나 안정적이라고 느꼈다. 극단적인 경우 외에 회사는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들은 해고당해도 지급되는 건강 보험을 보장받았다. 그들은 주식 시장의 변동에 의존하지 않는 연금 혜택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들에서도 일상으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보험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401(k) [미국의 기업 연금 — 옮긴이]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을까?

케빈 오벤던
영국 좌파저널리스트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기구를 마주하고 있다. 그 기구는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겐 누구에게나 공격을 퍼붓는다. 미국의 군사 공격과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조지프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쁜 소식도 우리가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1991년 이라크 전쟁, 1999년 발칸 반도 폭격, 2001년 아프가니스탄 확살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인의 발걸음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 규모와 백악관에 있는 전쟁광들의 무자비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부시의 아버지는 유엔을 이용해 걸프전을 은폐했다. 그의 후임자인 빌 클린턴은 미국 주도의 나토 동맹군을 소집했다. 부시 2세는 그의 충실한 집꾼인 토니 블레이어 정부를 끌어들이어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그것은 미국의 승리주의와 진정한 군사력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전쟁물이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점 역시 보여 준다.

부시 일당은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온갖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2001년 초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그가 벌이려는 전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미국 부통령 딕 체니는 모든 아랍 국가의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회유·협박·감언이설을 통해 사실상 부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 다른 국가들의 지지 아니면 적어도 우호적인 중립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무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무기들의 배치는 파키스탄 영공의 3분의 1과 터키·우즈베키스탄·기타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동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이 국가 기구들이

자국민의 대중적인 반제국주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미국의 종속국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런 국가의 지배자들이 부시와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 군대는 전쟁물이의 일환으로 중동에 있는 기지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군사 기지들은 거대한 분노를 일으킨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한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국에 반대하게 됐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 전역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분노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 반감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25년 전에 베트남에서 겪은 패배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지배자들이 돌아가는 전쟁물이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은 1945년 이후 미국의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은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에 군대를 대거 투입했다. 1968년까지 미국은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했다.

당시 미국의 경제력은 단연 세계 최대였다. 미국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한 몫은 오늘날보다 훨씬 컸다. 모든 주요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돼 있었다. 군비 지출도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최고 수준이었다. 절대 규모도 그랬고 경제 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랬다. 미국은 무장이 형편없던 베트남 군대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부시가 그러하듯 당시에도 미국 지배자들은 패배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다. 전환점은 베트남 게릴라들이 1968년 1월에 감행한 “구정 공세”였다.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패배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여긴 수도 사이공에서 미군 병사들이 공격받는 모습은 미국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내 버렸다.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전 운동의 불을 당겼다.

그래도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군대를 더 많이 보냈고 폭탄과 화학 무기들을 더 많이 투하했다. 베트남인들은 2백만 명 넘게 죽었음에도 저항했다. 그들은 싸울 만한 동기가 있다고 느꼈다. 그 뒤에도 전쟁은 7년 동안 질질 끌다가 1975년에 미군은 철수해야만 했다.

베트남은 미국의 권력에 강력한 타격이었다. 베트남의 사례는 미국이 후원하는 정권들에 반대하는 다른 투쟁들을 고무했다. 미국은 1980년대 초에 군비를 단계적으로 증강했다. 미국은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베트남 증후군”). 그 대신 미국은 대리 세력 — 중앙 아메리카의 우익 암살단이나 이란과 싸운 사담 후세인 군대 같은 — 에 의존했다.

미국의 막대한 국방 예산 때문에 소련은 미국의 미사일에 미사일로 대항해야 했고 그러다가 “일찍 자기 무덤을 파게 됐다.” 그러나 군비 경쟁은 미국 경제를 서방 경쟁 열강들보다 상대적으로 침체시킨 요인이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 많은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과 경쟁하던 초강대국 소련은 1990년대 초에 무너졌다. 미국 지배 계급의 핵심은 그들이 겪은 군사적·경제적 후퇴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미국 다국적 기업에 세계 시장이 개방되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도의 전쟁이 점차 잦아진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 미국의 권력은 얼마나 회복됐는가? 지금 미국은 세계 경제 산출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것은 10년 전보다는 높지만, 그 수치가 50퍼센트에 이르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절정기보다는 낮은 수치다.

미국 경제는 1990년대에 회복된 반면, 주요 경제 경쟁국 일본은 정체했다. 그러나 미국의 호황은 결코 1960년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제 끝나 버렸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웅

호해 온 바로 그 세계화 때문에 미국이 다른 지역의 경제 위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

베트남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복잡한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승리는 대중에게 별로 인기 없는 정권들을 집중 폭격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노획한 현지 세력들을 무장시켜 허깨비 같은 국가와 지상전을 벌이는 것과 집중 폭격을 결합시켰다. 미군 특수 부대는 주로 탈레반이 무너진 뒤에 진입했다. 미군 보병을 전면전에 투입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꺼림칙한 일이다.

한때 소말리아가 다음 표적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지난 1994년 40명 넘는 미군이 살해당한 뒤 미국 군대가 소말리아를 떠나야만 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국이 후원하는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주 좌익 게릴라들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있는 미군들

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대개 환호했지만, 일부는 미군이 결국 정글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질까 봐 두려워했다.

가장 호전적인 미국 지도자들은 지상군 파병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새로운 이라크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상군 파병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라크의 반정부 세력이나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를 이용해 지상전을 벌이고 싶어한다. 이것은 터키에게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안겨 준다.

터키의 지원은 미국의 이라크 폭격에 꼭 필요하지만, 터키는 쿠르드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이 이라크에서 터키로 확산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군사 행동은 안정된 제국이 아니라 더 심각한 정치 위기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일렬로 줄세우는 강패 같은 선임하사나 다름없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미국의 최고위층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독자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맹국들로부터 독립될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유럽 연합은 단일 국가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자”가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보다 더 약한 국가들도 미국이 강요하는 줄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해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위협하기 전

까지는 미국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미국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미국이 관장하는 세계는 점차 어지러워지고 있다. 그 세계에서 미국은 지역적 충돌에 말려들거나 미국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또 다른 상황, 즉 대중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것은 모든 대륙에서 한 세대 동안 찾아볼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부패한 지배자들, 다국적 기업,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분노에 바탕을 둔 진정한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이 존재한다.

반자본주의는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들의 성장을 도왔다. 그 운동들은 자국 지배자들과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자 대중과 빈민들을 모두 연결시킬 수 있다. 언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전 활동가들도 모르지만 부시도 알지 못한다. 4년 간의 고통스런 경기 침체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70년대에 이란 국가와 가공할 보안 기구가 봉기에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국왕의 친미 정권이 무너졌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운동들이 이미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우리 지배자들은 더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 대항하는 대중 항쟁은 더 신속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존 리즈

《저항의 세계화》
(북맥스), 《현대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
(갈무리)의 저자

근본적 사회변혁가는 세계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계급은 세계적 계급이며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가 계급도 마찬가지로 세계적 계급인데, 그들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경제 통합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은 점점 더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TV 방송을 보고,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수렴되고 있는 동시에,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민 국가로 나뉘어 있기도 하다. 지구상의 각 나라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정부와 법, 국기와 국가, 군대와 국경선, 출입국 규제와 노동법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고 경제 규모가 같고 군사력이 동등하다면 제국주의는 쉬울 것이다.

근본적 사회변혁가는 그저 노동자들에게 국제 지배계급에 맞선 공동 투쟁을 위해 국경을 넘어 단결하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독일의 금속 노동자들이나 미국의 광부들이나 호주의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국제적 연대 파업, 보이콧, 모금과 격려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처음엔 유럽과 미국에서, 그리고 점차 전 세계로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초기 자본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권력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은 산업과 금융의 힘과 그 힘을 바탕으로 만든 육군과 해군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들을 침략·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엄청난 부를 약탈했고 이는 식민지의 경제 발전을 더욱 제약했다. 가장 강력한 지배자들이던 영국·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일본·이탈리아의 지배자들은 인도·아시아·아일랜드·극동·중동·아프리카·카리브해 연안·남미를 식민지와 종속국으로 만들며 개척해 나갔다.

오늘날 형태상의 식민지는 이미 사라졌지만 강대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 약한 나

라들은 강대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차관이 보류되고, 해외 원조가 끊기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외교 협력을 거부당하고, 무역 체제를 받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실패하면 강대국은 자신이 보유한 거대한 군사력을 이용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강대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가난한 나라들에 강요할 수 있는 엄청난 다양한 제도와 기구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세계은행(WB 또는 IBRD),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을 통해 경제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연합(U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기구를 통해 외교적·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 체제다.

자연히 작은 나라와 피억압 민족들은 이런 제국주의 질서에 저항해 왔다. 몇 백 년 동안 계속된 아일랜드의 독립 운동, 인도의 독립 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들의 투쟁까지 제국주의 열강들은 항상 저항에 직면했다.

이런 투쟁들은 대개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 계급의 투쟁이 아니다. 이런 투쟁들은 민족 해방 투쟁들이며 토착민들의 자주적 통치를 위한 투쟁이다. 오늘날 이런 투쟁들은 이미 국민 국가를 형성한 국가들이 자국의 정책에 간섭하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인 경우가 흔하다. 흔히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에 참여하지만 이런 투쟁들을 지도하는 세력은 대개 노동자들보다는 중간 계급이거나 최소한 지배 계급 일부의 지원을 받는 기성 정치인들이다. 예컨대, 1991년 제2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런 경우였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양편 모두 저주 있으라’ 하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 강대국이 이미 성취한 것의 축소형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자들을, 특히 이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포악한 독재자일 경우 왜 그들을 지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편 모두 저주 있으라’ 하는 태도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양편은 서로 평등하지 않다. 한편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그것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경제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부유한 나라들로 인해 가난해진 나라들이 있다. 중동의 석유처럼 이들의 천연자원들은 약탈당하고 제정은 서방 은행 빚 갚느라 파탄난다. 예컨대, 미국과 니카라과, 미국과 쿠바의 분쟁은 제1차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의 대결처럼 서로 대등한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억압 국가와 훨씬 더 약한 피억압 국가를 보고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무조건 억압자에 맞서 피억압자 편에서야 한다. 비록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핍박하고 카스트로가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피억압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비민주적이고 소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만약 영국과 미국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이런 분쟁에서 이긴다면 전체 제국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국의 노동 계급을 공격하는 제국주의 나라 지배 계급의 힘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1970년대에 베트남이 미국을 이긴 것처럼 피억압 국가가 제국주의 강대국을 이긴다면 전체 제국주의 체제와 강대국 내에서 지배 계급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 뒤 미국 지배 계급이 겪은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으로 좌파가 대부분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과 매우 커다란 정치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NLF의 승리를 주장한 것이 옳은 이

유다.

그러면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는 자들과의 정치적 차이에 대해 조용히 있어야 하는가? 예컨대, 우리가 노무현을 지지하는 NL 계열의 전략은 이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근본적 사회 변혁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NL이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이 아니라 좌익 포퓰리스트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노동 계급의 계급 투쟁에 의존한다면 한층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NL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국과 이 나라의 사장들에 맞서 싸우는 근본 사회변혁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똑같은 관점이 그 밖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민족 해방 운동이 그 정의상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사장들과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NL이 미국에 반대할 때 이들과 같은 편에 서는 문제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는 따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비판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를 편들지 않고 피억압자들을 편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지는 비판적이지만 무조건적이다.

이같이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피억압 민족과 함께하는 동시에 피억압 민족 안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자기 나라의 지배 계급 또는 미래의 지배 계급에 맞서 싸우는 근본적 사회 변혁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계급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 즉 민족 해방 투쟁을 근본적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근본적 사회변혁가들은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지배 계급이 흑인 노동자들과 백인 노동자들을 대립시키고 “우리 나라를 지원”하기를 요구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위해 희생하라”며 저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들 나라안의 국가주의적·인종차별적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 계급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이다. 

김대중 정부 하의 “반자본주의” 투쟁

오유진 반자본주의 투쟁은 세계 자본주의 반대 투쟁이다. 《공산주의 선언》에서 말하는 노동자 투쟁이 내용은 국제적인 한편, 형식은 “처음에 일국적”임을 지적했다(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펴냄, 20쪽). 우리나라의 반자본주의 투쟁은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흔히 두 가지 형태를 취해 왔다. 하나는 반미 운동으로, 특히 주한미군에 반대하고 흔히 포퓰리스트들이 지도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주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이다.

포퓰리스트들의 반미 운동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학생 급진파들과 중간 계급의 급진화한 하층(전형적으로 농민)을 포함한다. 이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이 점을 새삼스레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 급진파들과 좌파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주체사상 지지자들이 지도한다 해서 그 의의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파주의이다. 노동 계급만이 억압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학생과 농민도 억압당한다. 레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노동 계급 외의 피억압자들이 벌이는 “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역설했다. 반미 운동의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그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의 일관성 결여와 협소함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민족주의자들답게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에만 반대하므로, 미국이 세계의 다른 곳(가령 이라크)에서 저지르는 침략 행위에 반대하는 것에는 그다지 열의가 없다. 전술이 뭔지 아는 좌파라면 이러한 진공을 메우기 위한 발의(공동전선)를 하고 그것을 이끌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자본주의의 효과(대량 해고, 노동 강도 강화, 임금 억제 등)에 반대해 왔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민영화” 반대는 약간 다르다. 자본주의가 사유 자본주의 또는 시장 자본주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 게 통념인 상황에서 “민영화” 반대는 자본주의 반대를 함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관리 하의 1998년 공황기에 민주노총 총력 파업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는데, 그 때 “신자유주의”는 그저 정부 정책이나 기업 방침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의 자본주의 자체를 뜻하는 듯했다.

비록 거의 모두 자본주의 자체가 아닌 그 효과에 반대하는 것이었을지라도, 노동자 투쟁은 파업의 형태

를 취한다면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경제 공황기의 노동자 파업은 일반화한 계급 투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노동자 계급 일반으로 확산된 그러한 투쟁은 혁명에 못 미치는 것임에도 조만간 국가 권력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가령 1968년 5월 프랑스 총파업이나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총파업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반자본주의 운동이 시애틀·프라하·제노바·세비아·피렌체의 형태를 취했던 경우가 한번 있었다. 2000년 10월 20일 아셈(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 반대 시위였다. 이 운동이 노동자 파업이 아니었음은 말할 나위 없지만, 노동조합(주로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주된 참가자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노조 소속 노동자들로서도 다른 피억압 사회 집단과 만나고, 그들의 요구와 염원을 접하게 되고,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등의 구호로 집약된 반자본주의 사상과 마주치는 건 교육적이고 유익한 경험이다. 전투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 지상주의적 유산을 던져버릴 필요가 있는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겐 특히 그렇다.

전투성

방금 나는 전투성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투성은 중요하다.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는 1998년 현대차 노조 파업이다. 김대중은 1997년 말 경제 공황의 여파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군부 정권에 맞섰던 야당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그에게 노동 계급 대부분이 큰 기대를 걸고 환상

을 가지는 건 자연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지배 계급 쪽에서 봤을 때 그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제해야 할 위기 관리 대리인이었다. 취임 첫 반년 간 그는 대량 해고를 성공적으로 밀어붙였고 노동자들은 얼떨결에 당했다.

하지만 1998년 8월 김대중은 주된 저항에 부딪혔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섰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노조 조직과 전투적 전통이 있다. 그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그들은 경찰 공격에 대비해 가슴에 식칼을 품고 연좌했다. 전경 부대들은 노동자들의 이 투지에 겁먹어 위축했다. 노동자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귀가하지 않고 아빠와 함께 연좌했다. 지금 금속연맹 상근 간부인 아무개 씨는 후일 모여대에서 열린 한 사회학 토론회에 초청자로 나와 당시의 열기를 회고하면서, 자신은 경찰보다 노동자들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의 공장 점거는 지도부의 소심함과 동요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리 해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고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당시의 구체적인 계급 세력 저울을 고려한다면 선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심각한 경제 위기의 시기에 대량 해고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불법”일지라도 공장 점거 말고는 일자리를 지킬 다른 방도가 없다.

현대차 노동자 투쟁은 그와 거의 같은 때 일어난 러시아와 브라질의 외채 상환 불능 사태와 함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대폭 수정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1998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국이 IMF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덕분에 경제 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펴냄, 220쪽). 이것은 우익과 자유주의자들의 공통된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의 진정한 해결책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둘째 사례는 노동자들이 전투적 전술의 채택을 망설임으로써 패배한 부정적 사례이다.

김대중 취임 3주년 기념

1998년 현대차 공장 점거 투쟁 때 가족들도 함께 싸웠다.



일인 2001년 2월 25일, 민주노총은 김대중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뒤이어 대우차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대중 정부는 “불법” 파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며 테러 진압 특수 부대를 시켜 선제공격을 했다. 대우차 노조는 좀더 일찍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꾸물거릴 여유가 없이 한시가 바빴는데도 굶뒀다. 노조 지도자들은 특히 공장 점거를 피하기 위해 애썼다.

결국 해피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공장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 말이다. 물론 나중에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공장 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항복 후 작업 복귀였다.

정부는 자신만만해져 맹렬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설상가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대중 퇴진이라는 “무모한” 발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그 덕분에 정부는 더욱 자신만만해졌다.

그러나 4월 중순쯤 정부는 무리를 하고 있었다. 공장 출입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항의하던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를 경찰이 구타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항의 운동이 물결쳤다. 민주노총 총력 파업이 7월 초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됐다. 그러나 내가 이 잡지의 다른 글(‘김대중 정부 하의 남북 관계’)에서 말했듯이 포퓰리스트들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민화협과의 공동 행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이 파업은 시작되기도 전에 취소됐다.

전망

그러므로 전투성뿐 아니라 정치도 중요하다. 물론 필요한 정치는 계급 정치이지,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노동자 의식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노동자 운동의 정치는 포퓰리즘이기 쉽다. 이것은 민족 분단,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 근래까지 군사 독재를 경험한 것, 정치적 억압의 지속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 운동에서 아직도 포퓰리즘이 유력하다 보니 포퓰리스트인 노무현이 권영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부격차 심화로 대표되는 계급 양극화와 그에 따른 (좌우) 정치 양극화가 계속 되면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입지는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경제의 상태가 열쇠인데, 내년부터 경제가 다시 나빠지면 경제와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돼 이런

2001년 8월 15일 민화협 행사에 반대해 열린 김대중 정부 규탄 특별 노동자 대회

추세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기업주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그다지 밝지 않게 보고 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 가격 인상을 불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삼성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에 거품이 있다. 저금리 덕분에 중간 계급 상층이 은행에서 대출해 아파트 등 투자에 열심이었던 탓이다. 가계 부채 과다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규제하면서 소비 지출이 줄고, 그래서 거품도 꺼져 가고 있다. 이처럼 경제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실제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자금(은행에서 대출한)을 비축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도 중요하다. 경제 정책이 시장주의적일수록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밖에 미국의 영향력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다른 변수들(정치적 부패 정도, 탄압 수준 등)도 역할을 한다.

이제 노무현은 자본가들이 노동 계급에 대한 공세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곤란을 노동 계급에 전가하는 것을 도와 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집권한 노무현은 김대중과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 <한겨레>처럼 말하고 <조선일보>처럼 행동하는 것 말이다.

좌파는 때때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1968년 프랑스의 “5월 반란” 전야에 <소셜리스트 레지스터>지의 앙드레 고르즈는 노동자 대중이 총파업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미국의 전쟁 몰이, 정치의 혼돈과 위기,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의 성장,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지역의 휘발성 강한 불안정 등 때문에 어쩌면 제2의 1968년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은 결코 사변이 아닐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 관계

오유진

미·소 간 냉전이 끝났는데도 한반도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미국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1989년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제도가 붕괴하고 세계 규모에서 냉전이 끝난 후 한반도는 오히려 불안정해졌다. 그 전에는 미국과 옛 소련이 각자 자신의 진영을 단속했다. 이제 양대 초강대국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자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1991년 걸프 전쟁, 1995년 보스니아 전쟁, 1999년 발칸 반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다가올 이라크 전쟁이 이를 예증한다. 한반도도 1994년 6월에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는 듯한 위기를 겪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북한 핵 사찰을 빌미로 일본과 중국에 미국의 맹주권을 분명히 해 두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2월 10일에 미국이 예멘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다음 날 북한이 핵 시설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한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올해 6월과 1999년 6월의 서해 교전도 미사일과 “핵무기” 제거를 핑계로 북한을 압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재천명하려는 미국에 북한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다. 자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심지어 “선제공격” 가능성을 얘기하기까지 하는 부시에게 김정일은 지령이도 많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냉전기의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게다가 미국의 대북 압박이라는 조건 하에서 김대중의 대북 정책은 모순으로 가득 찼 수밖에 없었다. 동해에서 여객선이 금강산을 왕래하고 있는 동안 서해에서 서해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햇볕 정책” 하에서 무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급속히 증가해 왔다. 남북 정상 회담과 6·15선언의 해인 2000년도 군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퍼센트 증가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제 첨단 무기를 10조 원어치나 구입했다.

세계적 불안정과 미국의 대북 압박에 더하여 국내에서 우익의 압력이 있었다. “북한의 위협” 운운하는 선전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우익은 이데올로기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김대중은 우익의 마녀 사냥에 직면할 때면 언제나 스스로 좌파를 마녀 사냥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

“두 개의 한국”이 언제나 갈등을 빚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둘은 야합도 했다. 가장 가증스런 사례는 “총풍”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사건이었다. 1996년 4월 11일 총선 직전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갑자기 남쪽을 향해 사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의 은밀한 요청에 북한 정권이 응답해 일어난 일이었음이 1997년 말에 밝혀졌다. 그 뒤로 남쪽 정권의 요청에 따른 북쪽 정권의 위협적 행위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북풍”이라고 일컫게 됐다.

15대 대선이 있었던 1997년 12월에도 안기부(현 국정원)는 북한 정보 기관과 합작해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낙선을 위한 음모를 꾸몄다. 안기부는 “총풍”을 재연해 달라고 북한쪽 보안 기관원들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흔히들 그러하듯이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의 한 형태 또는 모종의 노동자 국가로 본다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이처럼 칼 맑스가 “서로 싸우는 형제”라고 부른 것(자본가들)처럼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으르렁거리지

1999년 서해 교전

만 노동 계급의 주요 저항에 직면해서는 기꺼이 서로 협력하곤 한다. 북한은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민중을 억압하고 노동 계급을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다.

분단과 좌파

분단이 남한 좌파에 미친 효과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남한 좌파의 다수는 포퓰리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포퓰리즘은 “국민”의 이익과 의견·정서에 충실함을 표방하는 정치 사상과 정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배 계급 쪽에서 봤을 때는 대중[인기] 연합주의이고, 노동 계급 쪽에서 보면 사회 최상층만을 배제한 계급 협력주의이다.) 포퓰리스트들은 김대중이 북한에 화해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을 추구하려 애쓰는 듯하다 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을 기피해 왔다. 김대중은 이를 이용해 투쟁 노동자들과 다수 좌파(포퓰리즘적인)를 이간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려 해 왔다.

한 가지 사례는 2000년 여름 민주노총 투쟁이었다. 수천 명의 사회보힘노조원들과 롯데 호텔 노조원들이 작업장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하다가 6월 29일 테러 진압 특수 부대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진압 과정에서 야만적 폭력이 난무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은 남북 정상 회담과 6·15공동선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노동자들은 직장 이탈 파업과 7~8월 거의 매일 서울 시내 중심지를 행진하는 것으로서 저항하고 항의했다. 8월 15일 김대중 정부는 민화협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좌파가 내분했다.

비슷한 사태가 2001년 7월에도 재연됐다. 그러나 전해와 달리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투쟁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안팎의 포퓰리스트들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압력을 가해, 8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펜시리 말쑥피우지 못하도록, 정부가 물러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싸움을 말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정부와 공동으로 민화협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이렇게밖에 처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의 최근 사례는 노무현 지지를 위해 일부 주체사상 지지자들이 투표일 며칠 전에 발표한 권영길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남북 화해가 계급 투쟁에 선행해야 한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의 2단계 변혁 이론과 인민전선(국민 연합) 전략과 관계 있다. 변혁 단계 이론에 따르면 민족 해방이 먼저 오고 사회주의적 변혁은

그 다음에 와야 한다. 우리 민족의 경우 민족 해방은 민족 통일을 뜻한다고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말한다.

인민 전선 전략의 경우는 어떤가?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민족 화합적 자본가들과 냉전적 자본가들을 구별한다. 놀랍게도, 죽은 정주영과 도망중인 김우중이 민족 화합적 자본가에 포함된다. 현대와 대우가 북한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주영이 죽었을 때 한총련 지도자들은 조문을 가기까지 했다. 이런 종류의 자본가들과 동맹함으로써 이회창과 <조선일보> 같은 냉전 우익에 대항하려 함에 따라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노동자 투쟁을 외면하고 때로는 2001년 7월에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파업 파괴자 구실까지 해야 한다.

탈북자

탈냉전기의 가장 독특한 현상은 탈북자이다. 탈북자 문제는 동북 아시아 국가들에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미국에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탈북자 9명의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 국무부는 이미 미국 안에 있거나 국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상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의회는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철저히 침묵했다.

민을 만한 추산에 따르면, 탈북자가 적어도 30만 명이 중국에 있다 한다. 이들은 1995년 이래로 북한 민중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기근을 피해 가까스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안타깝게도 남한 좌파는 대부분 탈북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주체사상 지지자들은 탈북자들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북한 지배 관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은 탈북자를 무조건 환영하면 남한이 그들로 “넘쳐날지도” 모른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다. 전임 정부처럼 김대중 정부도 탈북자 입국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탈북자를 골칫거리로 여긴다. 일본 정부는 가장 엄격하게 입국을 통제하고 있는데, 만일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것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국제 노동 계급 단결의 원칙에 따라 모든 탈북자의 난민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더러 황장엽 같은 자가 포함되면 그럴 수 없지만 말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김어진

새로 집권한 정부는 김대중 집권 5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대중이 김영삼의 전철을 밟았듯, 차기 정권의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김대중 집권 5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 준 나날들이었고 노무현도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펴려 한다.

김대중은 집권하자마자 IMF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했다. IMF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자본 자유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이 명실상부한 IMF의 모범생임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IMF의 주문에 따라 금리는 30퍼센트대까지 뛰었고 IMF의 주문대로 기업 퇴출 정책도 진행됐다. 1997년 말에는 종합금융사들이 대거 퇴출되고 1998년 6월에는 55개 기업과 5개 은행이 폐쇄됐다.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련의 긴축 정책과 퇴출 정책으로 표현된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한국 경제를 더 곤두박질치게 했다. 경제성장률은 -6.7퍼센트까지 내려갔다. 집권 초기에 김대중 정부는 우선 현금을 만지고 보자는 생각에서 해외 매각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해외 매각의 결과는 비참했다. 제일은행은 공적자금을 16조 원 넘게 투입하고 뉴브리지 캐피탈에 단돈 5천억 원을 받고 팔았다. 대우차는 어떤가? 12조 원 가치의 회사가 1조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고 18조 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그런데도 GM은 법인세 · 취득세 ·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그러다 1998년 중반 이후부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인 초고금리 정책은 수정되기 시작했다. 6월 단기금리는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콜금리도 28퍼센트 수준에서 15퍼센트로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가 IMF 긴축 정책 위주에서 경기부양책 쪽으로 움직인 주된 이유는 “초고금리 정책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동반하자 대내외적 비판이 거세어졌기 때문이다.”(《동향과 전망》, 2002년 봄호.) 무엇보다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투쟁이 정책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스티글리츠는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한국 정부가 IMF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자신이

IMF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서가 아니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압력 때문이었다.

4대 부문구조조정의 결과

김대중 정부는 사기업화가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는 주장을 신앙처럼 내세웠다. 그러나 사기업화가 더 낫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서비스 질 악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미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공공요금은 9.5퍼센트나 경증 뛰어 올랐다. ‘물가인상을 3퍼센트 안정’이라는 말도 순전한 거짓말이다. 2001년 12월까지 공기업 6개가 사기업이 됐으며 2002년 현재 5개 공기업에 대한 사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은 1980년대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10년 동안 밀어붙인 사기업화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려 하다가 철도 · 발전 · 가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걸려 넘어져 뒤통거리고 말았다. 결국, 철도 사기업화는 차기 정권의 몫으로 남았다. 누가 당선되든 그는 철도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이 자신있게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워크아웃은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실패로 판명났다. 워크아웃 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그 돈을 엉뚱한 돈 잔치에 썼다. 예컨대 동아건설은 워크아웃 자금을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

재벌 개혁은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김대중 집권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더 강화됐다. 2001년 4월 현재 3대 그룹의 자산증가율은 IMF 구제 금융 직전인 1997년에 비해 49.8퍼센트나 늘어났다. 부채비율을 2백퍼센트로 줄이는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부채를 줄이기보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형식적으로만 부채 비율을 줄이는 식이었다. 김대중은 대중의 반재벌 감정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이다.

빅 딜 정책도 마찬가지다. 빅 딜은 재벌들 사이의 사업 맞바꾸기를 통해 과잉 중복 투자를 줄인다는 취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기업 재산의 내용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바꾸기가 불가능하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일련의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는 자본주의적 국가가 대기업의 이익을 거슬러 행동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 준다.

1차 금융 구조조정은 전혀 금융 부실을 해결하지 못했다. 되레 부메랑 효과만을 냈다. 예컨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다섯 개 은행을 퇴출하자 순식간에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투자신탁회사들로 몰렸고 수익률 경쟁 압력은 고금리의 대우 채권 매입으로 이어졌다. 대우그룹의 파산은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투신사들의 급작스런 부실은 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2차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은행 합병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 대형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금융 부실은 기업 부실의 결과다.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게 되면 금융 공황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다른 구조조정이 그렇듯이 은행 합병도 인위 감축을 뜻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다섯 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절대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P&A, 즉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 부채 이전 계약 방식을 은행 합병에 동원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던 공적자금 문제는 또 어떤가? 김대중 정부는 총 2백조 원의 공적자금을 썼다. 금융 구조조정에 막대한 돈을 퍼부었지만 금융권 전체의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났다.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IMF 구제 금융 3년 만에 기업당 평균 노동자 수는 위기 직전인 1996년 말에 비해 비재벌 기업의 경우 5.6퍼센트,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30.3퍼센트나 줄었다.

한 마디로 김대중 집권 5년의 구조조정은 이런 교훈을 남긴다. 제대로 성공하기도 어렵고 된다 해도 노동자 목자르기로 끝나는 구조조정을 위해 왜 압도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가.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김대중 집권 5년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의명분인 정부의 개입 축소가 실제 자본주의 현실과는 사뭇 다른 미사여구였을 뿐임을 입증한다. 금융강도위원회는 동아건설에 1조 원에 이르는 협조 융자를 해 줬고 대우의 부도를 막으려고 금융기관의 창구를 일일이 지도했고 현대의 파산과 하이닉스를 위해 구원 투수 노릇을 자처했다. 구원 투수 노릇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져 비리 사건의 기록 갱신 행진이 이어졌다. 벤처 육성, 주가 조작, 대통령 아들들, 검찰, 국정원 …. 이것들은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비리 사건들을 요약하는 코드명이었다.

집권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펴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종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런 정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만

들고 한나라당이 통과시켜 준 경제자유구역법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주들은 외국 자본과 10퍼센트만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노동기본권·환경·보건·사회복지·안전기준 같은 “의무 이행”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30퍼센트 늘어났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겨우 3퍼센트 늘어났을 뿐이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차이는 김대중 집권 전 7배였지만 지금은 9배로 늘었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시장주의 정책, 이윤 중심주의가 낳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과 대처,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책. 이것들과 단절할 때 우리 모두 김대중 정부의 시장경제 망령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철도 사기업화에 제동을 건 2002년 2월 철도 파업. 노무현은 이들과 다시 맞서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 점수

이덕우

민변 회원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번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4주년 기념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잇달아 인권 보고 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권선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이 말에 대해 감히 반대할 용기를 가진 자가 있을까?

아니 있었다. 인종 청소를 감행한 나치와 종군위안부로 우리 할머니들을 끌고 간 일본 제국주의! 그 악성 바이러스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는가? 불행히도 변종 바이러스들이 합리적 보수, 민족주의 등의 숙주를 매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이렇게 인권선언 54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선 국가보안법이 54번째 생일상을 먼저 받았다.(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국가보안법은 그 보다 9일 앞선 12월 1일 만들어졌다.)

당연히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이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55살을 먹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55년의 역사를 세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로 몰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빨갱이로 조작되는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될까.

그들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국가보안법 55년은 국민들의 피와 한의 역사였다. 그리고 강요된 반공 이념에 짓눌린 창백한 우리 강박관념의 역사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했다. 재임중 인권 상황에 대해 복잡하게 여러 분야를 훑어볼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당연히 폐기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잡아들였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는 인권 상황에 대한 리트머스지이기 때문이다.

굳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갈 필요도 없다. 김대중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차이만 살펴봐도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국민은 모두 1천9백77명이다. 김대중 정권 4년 10개월간 구속된 국민은 1천36명이다. 수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년 평균 2백명이 넘는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유로, 아니 빨갱이로 몰려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고 결과 형량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공약하더니 노벨상을 타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예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단지 상징적인 두 가지 사례만 짚어 보기로 한다. 김영삼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몰려 한총련 전체를 이

적단체로 몰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잘못조차 바로 잡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고 한총련이 정부에서 꼬투리 잡던 강령을 고쳤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대의원들의 탈퇴를 강요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다. 한번 이적단체이면 영원한 이적단체다.(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므로 대의원 등 간부가 되면 이적단체구성죄다. 이러니 해마다 한총련 출범식 후 경찰은 바빴다. 전국 각지의 대공경찰들이 발 벗고 나서 대의원 부모들을 붙잡고 입에선 침이 튼다.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대학 보냈는데 빨갱이 만들어 큰일”이라는 형사들의 말에 하늘이 무너진다. 노랗다. “내 아들이, 내

김대중이 양산한 한총련 수배자들





딸이 빨갱이라니.” 급기야 시골 작은 마을에 소문이 퍼진다. “아무개가 대학 가더니 빨갱이가 되었다네”.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형사들을 따라 자식 잡으러 다닌다. 그리고 운 좋게 잡으면 농약병을 자식 얼굴에 들이대고 “애비 죽는 꼴 볼 데냐, 탈퇴해라”고 한다. 실화다. 한총련 대의원 탈퇴 공작이란다. 일제도 독립 운동을 하던 학생들 조직 전체를 치안유지법으로 엮어 넣지는 않았다. 이승만은 물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사 독재자들도 전국 학생조직을 이적단체로 몰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문민 정부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적단체로 올가미를 씌워 버렸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올가미를 끌고 다닌 것이다.

최근 검찰은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등 3명의 한청 간부를 이적단체 구성죄로 구속 기소했다. 한청의 강령을 보면,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확립하고 노동 생활에 바탕한 정서 함양, 민족 문화 창조에 앞장선다는 것과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여 통일 운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강령 어디를 보아도 이적단체로 볼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한청은 전국 53개의 지역·부문 단체들이 모인 단체이다. 그 회원들이 모두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대의원 등 간부는 언제라도 국가보안법의 측수가 뒤통수를 노리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았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 국민의 정부는 한청을 이적단체로 단죄하려

는 것인지아연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국가안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기초는 총칼의 무력이나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 아니다. 국가의 인권 보장과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정치 용어를 만든 마키아벨리도 “제 아무리 많은 성을 쌓는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모래 위의 성과 같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그리고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이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키고 책을 불사르며 만리장성까지 쌓았음에도 그가 죽자 진나라는 곧 망하고 말았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민심은 천심이다. 지난 55년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

다 그만두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일만 가지고 김대중 정권에게 인권 점수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채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붉은 악마’가 6월에 시청 앞 광장을 붉게 물들었고,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하는 겁 없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 네거리 반딧불로 내려앉았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어느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어떤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가. 결국 사람 대접은 받고 싶은 우리들이 가려낼 밖에.

죽정이인지, 알곡인지. 

김대중 정부의 노동 정책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가 1970~1980년대의 노사관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억압적인 노사관계의 관행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노동자 구속과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현 정권에서 구속된 노동자 숫자가 과거 정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나 아직도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구사대를 동원하는 구태의연함이 여전히 노사관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노동 정책이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김대중 정권은 2·6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노사정 위원회를 만드는 등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력과 사법적인 대응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여전히 노동 배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과거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 경제 위기와 구조 조정의 폭풍 속에서 현 정부가 선택한 노동 정책의 방향에서 찾을 수 있겠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형성해 가는 정치·경제적 이행 과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던 구조 개혁 시기에 김

대중 정권이 언급한 '민주주의'를 노동 문제에서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노동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노동 억압적이고 노동 배제적이던 과거의 노동 정책에서 탈피해 노동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는데도, 김대중 정권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노사관계를 위기 국면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갈등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택한 일련의 정책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기 국면에서의 상황 대처적 성격을 가진 소극적 정책을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 정책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이 경제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동 정책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은 노동과의 협상을 통해 추진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 과정은 노동의 반대와 저항을 뚫고 추진되는 돌파형이었다. 정리해고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리해고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노동을 참여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타협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부가 원한 것은 노동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새로운 노사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수용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챙기는 것이었던 셈이다. 노사정 위원회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전략에 근거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기 국면을 탈출하는 위기 관리 기구로서의 임무가 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가 절실했는데도, 실업자 조합원 자격·노조 전임자 임금·복수노조·산별노조 강화를 위한 제도와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만행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부조화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급격한 노동 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존 노사 관계 제도의 범위에 포괄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 정규직 중심의 노사 관계 제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 등 노동 시장에서 지위가 현저히 불안해 노동조합을 조직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되고 있다. 또, 실업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다. 더욱이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IMF가 주도하면서 유연화와 사기업화(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조개혁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약화라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가 시도한 신노사 문화 운동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라 할 수 없으며 과거의 노사 협력 캠페인이나 노사 화합 선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서 진행돼 정부의 신노사 문화 운동은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노동 정책의 수준이 얼마나 구태의연한 것인지를 보여 줄 뿐이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선택은 노동 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두었을 뿐 아니라 노동부의 노동 행정이 공안 부처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부장관이 지역 안배와 경제 부처 출신의 자리 마련을 위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공안부처가 파업 현장의 경찰 투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 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 프로그램 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상황 대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경

제와 노동 시장 구조를 급격히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이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부문과 정치 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의 각종 제도와 관행은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정경유착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은 관치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크게 나빠지고 있으나,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구시대적인 노동 정책에 기대어 노사관계 개선보다는 노사관계에서 눈앞의 이익을 쫓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사관계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한 채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당선의 요인과 민주노동당의 미래

김인식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눌렀다. 노무현은 대중의 반이회창 정서 덕분에 48.9퍼센트를 득표해 근소한 차이(2.3퍼센트)로 승리했다. 이회창으로 표상되는 구체제의 복귀를 국민의 다수가 거부했다.

투표 전 날에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했는데도 노무현이 승리한 사실은 노무현의 승리가 재벌인 정몽준의 보수적 기반에 달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이 되기를 바라는 피억압 대중의 지지 덕분이었음을 보여 준다. 노-정 단일화 자체가 이회창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중 압력의 결과였다.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12월 20일치)조차 이회창의 패인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회창은] 결코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에서 졌다. … 이 후보의 패인은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 [“젊은 세대의 변화 욕구”]을 읽지 못한 데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반미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반미 시위는 “이[회창] 후보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 …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반미면 어쩌냐’고 했던 노[무현] 후보에게 반미 정서가 강한 20~30대의 표가 대거 몰”렸다.(<중앙일보> 12월 20일치.)

반미 시위의 효과를 우려한 이회창은 운동을 지지하는 척해야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부영은 “국민들의 소파 개정 요구를 외면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하고 말했다.

12월 7일에 이회창은 먼박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추모 미사에 참석해, 언론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반미 시위에 참가한 듯한 인상을 주려 애썼다. 미사를 집전한 신부들은 이회창에게 “떠나 달라”고 요구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과 신자들은 이회창에게 종이 뭉치와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회창이 친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이렇게 애쓴 반면, 평소 “미국에 일방적으로 굽실대지 않겠다”고 말해 온 노무현은 오히려 보수파의 눈치를 보느라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고 부시 직접 사과 서명도 거부했다. “정치 지도자가 시위와 서명에 함께 참가한다는 것은 … 시류에 영합하는 자세일 수도 있다.”

노무현과 이회창의 이런 뒤바뀐 듯한 행태에도 12월 9일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은 이회창을 9.6퍼센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조선일보> 12월 20일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이 반격에 나섰다. 12월 11일 미국은 스커드 미사일을 신고 향해하던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했다.

이것은 또한 반미 운동 내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이자 선거에서 우파를 돕기 위한 책략이었다. 정치적 양극화 촉진 시도였다. 조갑제도 간파했듯이, 양극화가 가속화한다면 우파인 이회창에게 이롭고 중도파인 노무현에게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청에 응답해 이회창은 이번 대선이 ‘안정이나, 불안이냐의 선택’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런 기류가 얼마간 반영됐다. 북한의 ‘핵 동결 조치 해제’ 선언 직후 노무현과 이회창의 지지율 차이는 12일에 7.3퍼센트, 14일에 6.6퍼센트로 다소 좁혀졌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유에스에이 투데이> 지

적대로 “북핵 문제가 남북한 사이보다 북한과 미국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남북 화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시의 대북 강경 노선을 이회창이 지지했다. 그 때문에 이회창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경파로 찍혀 있었다.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 직후에 노무현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수출을 비난했으나, 여론이 반전되는 조짐이 보이자 “전쟁이나 평화냐”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군축을 제안하자 북한의 위협을 들어 반대했다. 이렇듯 노무현은 오락가락한다. 그럼에도, 냉전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낸 이회창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 덕분에 노무현은 대중적 반미 시위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그리고 “여중생 압사 사건과 미군 병사 무죄 판결로 불붙은 한국인들의 반미 운동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 이런 분위기” 덕분에 “해묵은 색깔론이나 냉전적 ‘북풍’, 그리고 미국의 입김이 예전처럼 먹혀들 수 없게 됐”(〈한겨레〉 12월 13일치). 겐럴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60퍼센트가 더는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수층은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다수 국민은 변화를 더 열망했다. 젊은 층에선 이 후보의 주장을 ‘냉전 시대의 논리’쯤으로 치부해 버렸다.”(〈중앙일보〉 12월 20일치.)

노무현의 당선과 진보 진영

노무현은 대북 강경론자이자 친제벌적인 이회창에 대한 피억압 대중의 반감 정서에 기대어 승리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당선되자마자 피억압 대중의 기대와 대면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수많은 유산을 남겼다. 그 가운데 노무현에게 가장 위험한 유산은 노동자 운동의 성장이다.

이회창이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노무현의 입에 발린 ‘따뜻한 말’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만의 뚜껑이 열리지 못하게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당시 노동자 대중은 34년 일당 독재가 붕괴되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기대감에 사태의 악화를 잠시 기다릴 태세가 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 대중은 5년 동안 자유주의 정부의 배신을 경험했다.

그래서 97만 명(39퍼센트)이 노무현에게 아무런 환상을 갖지 않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 1997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얻은 30여만 표에 비해 세 배가 많은 수치다. 더구나 권 후보는 1997년보다 더 좌파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와 그의 실체 사이의 격차 때문에 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노무현 당선은 중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에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이 진보 진영에 결국엔 더 유리할 수 있다면 권영길보다 노무현을 지지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자신도 투표 하루 전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랠프 네이더가 앨 고어의 표를 잠식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바람에 랠프 네이더의 자유주의 노선과 지지자들의 처지가 더 어렵게 됐다.” 일부 포퓰리스트들도 선거 며칠 전에 그 비슷한 이유를 들어 권영길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부시가 이긴 건 그의 동생 켄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의 선거 부정 덕택이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기성·자본가 정당들을 지지하는 대가로 돌아올 것이 거의 없다는 노동자 대중의 역사적 자각이 민주노동당의 등장 배경이었다. 진보 정당은 노무현의 품안에서가 아니라 노무현과 단절·투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노무현 당선에 씩씩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노무현의 지지 기반과 일부 겹치는 바람에 치열하게 논

쟁을 벌였던 탓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 심리가 발동했을 터이고 이로 말미암아 노무현 승리에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다.

어떤 이들은 1997년 대선 결과를 떠올릴 수도 있다. 또다시 부르주아 자유주의자에게 밀려났다고 여길 수도 있다. 외관상 비슷한 상황이니까 말이다.(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때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누가 나와 민주노동당의 길을 막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갑갑할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양당 체제가 형성된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진보 정당은 안 되는구나 하는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불과 반 년 전에만 하더라도 언론들은 세계가 우경화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과연 그런가? 11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파 자유당이 참패했다. 이 당은 1999년 선거에서 27퍼센트를 득표해 보수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자유당의 핵심 인물인 외르크 하이더가 히틀러 숭배자인 나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10퍼센트밖에 얻지 못했다. 물론 그들이 얻은 10퍼센트를 간단히 제쳐 버릴 수는 없지만 말이다.

10월 브라질 대선에서는 좌파 정당인 노동자당(PT)의 룰라가 승리했다. 11월 에콰도르 선거에서는 좌파 정치인인 루시오 구티에레스가 대통령에 뽑혔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좌파인 엘리사 카리오와 트로츠키주의자인 루이스 사모라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내쫓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노무현은 포퓰리스트 특유의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을 거듭할 것이다. 노무현을 지지한다면 노무현의 배신이 낳는 분노에 응답해 노동자 대중과 함께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과 맞서 싸울 수 없다면 진보 정당은 기성·자본가 정당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노무현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정진희

박빙의 승부 끝에 노무현이 당선됐다. 노무현은 우파 이회창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개혁 열망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집권하면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노무현이야말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은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은 정몽준과 단일화한 뒤 자신은 “진보가 아니다” 하고 거듭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주장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미온적이었고 주한 미군 철수에도 반대했다.

심지어 노무현은 처음에는 국민의 80퍼센트가 지지하는 소파 개정 요구조차 지지하지 않았다. 소파 개정은 공약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반미 시위가 확산되자 그제서야 소파 개정을 지지했다.

이런 모습은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노무현의 온건한 태도가 우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라고 두들겼다. 그의 온건한 태도가 집권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5년 전에도 나온 낡은 변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이 김종필과 손잡고 우경화할 때도 이렇게 해석됐다. 많은 사람들은 집권 내내 김대중이 왼쪽으로 이동하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1년 대우차 노조에 정리 해고 수용을 중용하다 달걀 세례를 받은 노무현

노무현이 집권해 자신의 기반을 다지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6공 2기 정부로 불린 김영삼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해 자신의 기반을 만든 것은 1995년부터였다. 그러나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96년 12월 28일 새벽에 집권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이 몰래 모여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혁은커녕 의회민주주의조차 유린한 이 사건으로 김영삼은 완전히 몰락했다.

노무현이 당선 뒤 민주당과 진정으로 결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공상이다. 김대중은 집권 내내 자민련하고도 결별하지 못했다. 이것은 김대중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 아니다. 김대중은 소수와 정권의 한계 때문에 집권 내내 자민련과의 공조에 매달려야 했다.

노무현은 당선하면 민주당 내 보수파를 배제하고 재창당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입발림 말일 뿐이다. 현재 민주당은 의회에서 소수당이다. 만약 노무현의 말처럼 그가 집권 뒤 민주당 내 보수파를 제거한다면, 가뜩이나 협소한 그의 정치적 기반은 더 협소해질 것이다. 노무현은 대중 투쟁을 지지·고무하는 좌파가 아니다. 이런 그가 무엇에 의지해 우파의 공세에 맞설 수 있을까?

노무현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의 주된 사회적 기반은 상층 중간 계급이다. 비록 그가 포퓰리즘적 연사로 하층 중간 계급과 노동 계급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가 걸핏하면 ‘서민’ 운운하면서도 부자와 대기업주에 유리한 정책들을 지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층 중간 계급은 대체로 대자본가들을 동경하고 쫓는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 반대, 공기업의 사기업화 지지, 교육비·의료비 인상 지지,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부정, 노동시장 유연화 찬성, 경제자유구역법 찬성 등.

그는 서민들이 모아 준 ‘희망 패지 저금통’을 털어 정치를 하는 양 말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선거 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3백억 원 가까운 돈을 개미들의 고사리손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노무현도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기반과 단절할 수 없다. 노무현이 집권하면 정말 개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꿈이다.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 법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끔찍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노동·환경·여성·인권·교육·의료 등 안 걸리는 분야가 거의 없다.

기업들의 천국

경제자유구역법은 김대중 집권 5년 동안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의 결정판이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해 남성 노동자들은 18퍼센트 이상, 여성 노동자들은 20퍼센트 이상 임금이 삭감된다. 게다가 파견 대상 업종을 '전문 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파견근로제는 파견 대상 업종이 제한돼 있는 지금도 이미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턱없이 낮은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 의무조차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 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노동쟁의조정법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삼아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제약해 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만으로 사실상 주요 환경 관련 법 34개의 적용이 면제되고 환경 관련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한면희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비판하면서 1997년 여수에 진출한 한 독일계 기업이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한 독가스인 보스겐 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환경 단체들은 "규제의 사각 지대인 특구로 찾아오는 자본은 각 나라에서 퇴출당한 반환경적 사양 산업과 퇴폐 산업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정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법인세·직접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기업들의 천국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만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다. 그리고 주식 지분이 10퍼센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동안 원자재나 제품 납품·구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이런 대상 규정은 국내 외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은 국제 공항이 있는 8개 지역과 28개 항만 도시다. 이 지역들을 모두 합하면 한국의 주요 경제권이 대부분 포함된다. 현재 유력한 지역으로 부산, 인천, 광양이 꼽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몇몇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공격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기업가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을 요구하며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전체로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하는 시기와 적용 수준은 양 계급 간의 힘 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철도와 가스 산업 사유화 법안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사유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 때문에 국회 통과조차 미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요구하며 내년 1~2월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핵 공포를 부추기는가?

정진희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선언으로 북한 핵 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북한 핵 논란에 불붙이려 애쓰던 우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달려들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가 93~94년에 이른 제2의 핵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하고 말한다. 친미 우파들은 최근 급속히 번져 온 반미 운동을 공격하고 이회창의 당선을 돕고자 북한 핵 공포를 부추겼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 광풍은 이번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몰아쳐 왔다. 올해 초 미국이 북한을 핵 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핵 태세 검토”). 지난 1998년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는 모의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것도 올해 9월에 드러났다.

이 실험을 폭로한 미국의 안보 연구 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스 크리스텐센의 말을 들어 보면, 이러한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2002년 9월 12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와 한 인터뷰).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의 버튼을 누르면 30분 만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우파들은 북한이 이번 발표로 제네바 합의를 폐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12월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먼저 어긴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합의 뒤 3개월 내에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2003년까지 짓기로 한 경수로 건설도 계속 지연시켰다.

게 다 가

미국은 북한의 발표 직전에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나포·억류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조차 무시한 것이었다. 북한과 예멘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외화 벌이를 위해 미사일을 수출했다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선박 나포 3주 전부터 감시·추적하다 대규모 반미 시위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터뜨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 고조되는 반미 운동을 꺾고 대선에서 우파를 돕기 위해 멋대로 북한 선박을 가로막았다가 동맹국 예멘의 항의가 있자 슬그머니 놓아줬다.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선언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아직 이 선언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압박해 점점 북한을 핵 개발로 내몰고 있다.

핵 위협의 근원

미국은 거듭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비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 제조·판매·보유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미국은 지난 5년 간(1997~2001) 1990년 달러 가격으로 4백48억 달러 상당을 수출해 무기 수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군비 지출액과 증가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한반도를 진짜 위협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하고 설사 있다 해도 미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북한 핵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지구를 몇 번이고 날려 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의 발표를 보면, 현재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핵탄두는 1만 6백 개다. 여기에는 1천7백 개의 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5백50기가 포함된다. 또, 총 3천1백20개의 탄두, 토마호크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 3백20기를 싣는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 18척도 포함된다. B-52 폭격기

94대, B-2 폭격기 21대도 있다. B-2 폭격기는 미국이 새로 개발한 “지표 침투형” 핵폭탄을 싣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영국은 핵 미사일 64기를 실을 수 있는 핵 잠수함 4척을 비롯해 약 2백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러시아는 핵무기 비축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핵 강국이다. 러시아는 8천4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7백6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작전용 핵잠수함 14척, 78대의 폭격기가 포함돼 있다.

프랑스는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60대와 핵 잠수함 3척을 포함해 2백88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중국의 핵 보유 실태는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백30대, 1백25기의 지상 발사 미사일, 12척의 핵 잠수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국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라크에 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경비전 이스라엘은 이미 약 2백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 사찰도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30억 달러의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1995년에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F-16 전투기 2백60대를 미국한테서 샀거나 무상원조 “받았다.” 올해 6월에 전직 미 국방부·국무부 관리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스라엘이 핵탄두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잠수함 3척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태세가 돼 있다. 1년 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한 보도를 보면, 현재 미국의 방위 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전쟁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미실험 우라늄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35만 명의 인구 가운데 14만 명이 죽었다. 그 뒤 미국은 또 다른 일본 도시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려 27만 명의 주민 가운데 7만 명을 죽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미국이야말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세계를 핵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핵 불량배다.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한 일

조박은정

- 1998년 11월 7일 15명의 무기사찰단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 둔 채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 1998년 12월 16일 남아있던 사찰단원들도 이라크를 떠났다.
- 1998년 12월 17일 사찰단원들이 이라크를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막의 여우” 작전이 시작됐다.

언론은 유엔 무기사찰단이 1998년 12월 이라크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당시 리처드 버틀러가 이끈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것은 그 직후 벌어진 미국과 영국의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유에스에이 투데이>(1998년 12월 17일치)는 이렇게 보도했다.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버틀러가 유엔 안보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기사찰단을 철수시켰다고 비난했다.” 그 이튿날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공격을 예상한 버틀러가 화요일 밤에 단원들에게 바그다드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하고 보도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수석 무기사찰단원이던 스콧 리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이라크 국내 통신을 추적하기 위해 1992년부터 사찰단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CIA가 개입한 사례는 분명히 많다. 그 중 많은 것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든다. 누가 명령했는가? 한 가지 일은 CIA 요원들이 포함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나는 언제나 그렇게 했다. 내가 통솔하는 모든 팀에 CIA 요원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훌륭했다. … 이라크 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 내라는 유엔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한,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됐다. 유엔의 임무와 무관한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찰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순간, 사찰 제도 전체의 신용이 떨어졌다. 몇몇 프로그램들 — 가장 중요한 것은 1996~1998년에 내가 기획해서 실행한 신호 정보 프로그램이다 — 은 CIA가 사담 후세인을 염탐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허용됐다.”

1999년 미국 정부는 무기사찰단을 이용해 이라크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 포스트> 1999년 1월 8일치는 이렇게 보도했다.

“거의 3년 동안 미국은 무기사찰단원들이 이라크에 몰래 설치한 장비를 이용해 후세인 대통령의 최근 보안군의 암호 무선 통신을 때때로 감시해 왔다고 유엔과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1996년과 1997년에 무기사찰단원들이 휴대한 상업용 장비가 이라크의 통신을 포착했다. 이것은 그 뒤 영국·이스라엘·미국에 있는 분석 센터들로 보내져 해독됐다.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라크 정부를 뒤흔들려 했다. 그리고 CIA 요원들은 후세인을 타도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정예 수비대원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무기사찰단의 마지막 보고서는 사찰단이 철수하기 직전인 1998년 12월 15일에 전달됐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그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12월 16일치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정부 관리들이 “버틀러와 계속 대화하면서 그 보고서 문안을 완성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그 보고서는 “사막의 여우” 작전의 핑계 구실을 했다.

1998년 12월 16일 밤,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이 이라크에 떨어졌다. 무기사찰단의 활동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 이라크 정권에 대해서 1991년 걸프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지도부를 보호하는 첩보·안보·운송 기관들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 체계 역시 잘 알고 있다. 무기사찰단은 은폐된 대량 살상 무기를 찾는다면 이라크의 특수 건물과 사무실 등을 사찰해 정보를 모았다. 바로 이것이 12월 폭격의 표적 목록을 작성하는 기초가 됐다.

표적 목록을 보면, 그리고 “사막의 여우” 작전을 잘 아는 관리나 분석가 10여 명과 나눈 폭넓은 대화들을 보면, 미국과 영국의 폭격이 무기사찰단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후세인에 대한 반사적 대응 이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백 개의 표적 중 서른다섯 개는 이라크의 방공망 관련 시설이었다. 이것은 어떤 공중전에서도 필수적인 첫 단계다. 왜냐하면 이런 곳을 파괴하면 다른 군대를 위한 길을 터주고 전반적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열세 개의 표적만이 생화학 무기나 탄도 미사일 관련 시설이었다.

“사막의 여우” 작전의 핵심(표적 1백 개 중 49개)

무기 관련 표적 자체는 별로 없었다. 의심스런 모든 시설들 — 이븐 알하이탐, 카라마, 알킨디인 모술, 사히야트, 타지, 자파라니야 — 에는 이미 무기사찰단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사막의 여우” 작전 당시 생화학 무기 생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폭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미국이 “부수적 피해”의 가능성 때

문에 그런 표적들을 회피했다고 떠들어 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표적을 선정한 자들이 진짜 무기 생산 시설이라고 충분히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70시간의 폭격이 이라크 군대를 철저히 파괴할 수 있었고 43일 이상 수만 번의 공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 답은 역시 표적 목록에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폭탄과 뜻밖의 표적 정보 덕분에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정부의 믿음에 있다.

무기사찰단의 역사, 그들이 CIA를 위해 일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라크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꺼린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엔 무기사찰단 보고서는 www.un.org/depts/unscom/, 유엔 보고서는 www.un.org 참조)

은 이라크 정권 자체였다. “사막의 여우”가 “사막의 폭풍”(1991년 1~2월에 일어난 걸프 전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전자가 후세인의 측근이나 참모들과 관련된 건물들을 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후세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라크 정보 기관, 바트당 조직, 안보·운송 기구 등이 바로 그런 표적이었다. 비밀 정보 기관의 문서 보관소뿐 아니라 SSO 컴퓨터 센터도 표적이 됐다. 바그다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인근의 국영 라디오·TV 방송국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함께 폭격당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내부 인사들은 무기사찰단한테서 뜻밖의 정보를 엄청나게 얻어 냈고, 이를 이용해 후세인의 내부 기구를 폭격하면 이라크 지도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후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네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네 머리 속에 들어가 있다.” 표적 목록이 없었다면 그런 말은 완전한 허장성세였을 것이다.

“사막의 여우” 작전 당시 표적 목록의 기원은 1998년 10월까지 올라간다. 당시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군사 행동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실제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합동참모본부와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붕괴시키고 줄이기” 위한 군사 작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기사찰단한테서 얻은 자료 덕분에 표적이 될 만한 대상들은 매우 많았다. 표적들은 일곱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됐다. 11월이 되자 계획이 나왔다. 당시 미군 중부사령관 앤서니 지니가 내린 명령을 보면, 대량 살상

유엔 무기사찰단은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

소책자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는가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은 중동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아랍 민중은 어떻게 미국에 저항했는가?

이 소책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값 1,500원

〈아랍은 왜 미국에 분개하는가〉 개정 증보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수현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옛 새 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2만5천 명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는 미군이 중동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미군의 임무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순전한 거짓말이었다.

부시와 그 참모들은 몰래 끔찍한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 달 뒤에 미군 장성 마이클 듀건은 그 계획의 일부를 누설했다. 바그다드와 그 밖의 다른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하고 사담 후세인을 암살한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솔직한 듀건은 자리에서 쫓겨났다.

전쟁 개시 전까지 5개월 동안 부시는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죄다 동원했다. 침략에 맞서야 한다, 약소국을 보호해야 한다, 독재자와 대결해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등등.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석유와 패권이었다.

1980~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 때문에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이라크는 석유를 대거 수출해 수입을 올리려 했다. 그러나 쿠웨이트가 세계 시장에 석유를 덤핑 판매했다. 이 때문에 유가는 하락했고 이라크의 곤경은 더욱 가중됐다. 이라크는 양국 접경 지대의 루말라 유전에서 쿠웨이트가 이라크 석유를 훔쳐간다고 비난했다.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미국 대사는 후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국경 분쟁...에는 관심 없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합병하자 서방의 태도는 1백퍼센트 바뀌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쿠웨이트가 당근을 키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부시는 이라크 공격이 미국의 패권을 재천명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했다. 당시는 냉전이 막 끝났을 때였다. 미국 지배자들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제적 경쟁국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적 경쟁국들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까 봐 걱정했다. 부시는 전쟁을 통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경쟁국들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순응하게끔 단속하려 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

했다. “우리의 첫번째 목표는 옛 소련을 대신해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전략은 전 세계에서 미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시는 많은 국가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반이라크 전선을 결성했다. 특히, 아랍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세계은행에 압력을 넣어 이집트의 외채 1백4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다. 시리아가 레바논의 우파 정부를 타도하고 친시리아 정부를 세우도록 허용해 주었다.

또, 소련이 리투아니아의 독립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도 미국은 침묵을 지켰다. 중국에도 차관을 제공했고, 1989년 천안문 학살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예멘처럼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은 나라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

미국은 이라크 경제 봉쇄를 강요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군대와 전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까 봐 우려했다.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아랍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지 못하게 애를 썼다. 1991년 1월 15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 시한이 만료되기 몇 시간 전에 프랑스가 평화안을 제시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부분 그 평화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막의 학살

1991년 1월 17일 바그다드 공습으로 시작된 “사막의 폭풍” 작전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다국적군은 역사상 그 어떤 공습보다 단기간에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라크의 민간 사회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도로·철도·교량·상하수도·공장·발전소 등을 초토화시켜 이라크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라크인 20만 명이 학살당했다.

“병커 버스터”(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콘크리트도 뚫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지하 엄폐 시설 파괴 폭탄)로 파괴당한 바그다드의 한 지하 방공호에서는 무려 4백여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1991년 2월 15일 후세인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는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후세인의 항복을 거부했다. 미국은 어떻게든 지상전을 감행하고 싶었다. 엿새 뒤에 미군과 다국적군이 쿠웨이트와 이라크 남부로 진격했고 이라크 군대는 퇴각했다.

2월 28일 부시가 휴전을 선포하기 직전에 미군과 영국군은 무방비 상태로 퇴각하는 이라크 병사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의 바스라로 가는 도로 위에서는 잔혹한 학살극이 벌어졌다.

허둥지둥 도망치던 이라크 병사들을 다국적군 탱크 부대가 가로막았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이라크 병사들에게 미군 비행기들은 폭탄을 퍼붓고 기총소사를 해댔다. 약 80킬로미터에 걸친 고속도로 위에서 이라크 병사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미군은 이라크 병사들의 시체를 불도저로 밀어내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 바스라도로는 “죽음의 고속도로”가 됐다.

휴전 직전에 부시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봉기를 일으켜 후세인을 타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남부의 시아파와 북부의 쿠르드족이 후세인에 대해 봉기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이를 외면했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봉기하자 평범한 이라크인들도 후세인 정권의 경찰 분부, 병영, 감옥 등을 습격했다. 군중은 지하 감옥으로 쳐들어가 고문실을 파괴하고 수십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정치수들을 석방했다. 또, 후세인 정권의 관리들에게 린치를 가했다. 거의 2주 동안 이라크 민중이 전국을 통제했고 후세인 정권은 거의 붕괴할 듯했다.

바로 그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후세인을 도와 주었다. 부시가 원한 것은 반후세인 군사 쿠데타였지 (아래로부터의) 민중 봉기가 아니었다. 이라크의 민중 봉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의 다른 친미 독재 국가 민중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될 수도 있었다. 미국 관리들은 민중 봉기가 성공해 이라크 국가가 붕괴하고 중동의 “꿀칫거리” 이란의 힘이 강화될까 봐 두려워했다.

미군 고위층은 반란군 대표들과 면담을 거절했다. 그리고 후세인 정권이 휴전 협정을 어기고 반란군을 공격할 때 이를 모른 체했다. 후세인 군대가 이라크 남

미국의 폭격으로 1천1백 86 명의 민간인이 죽은 아마라야시민 방공호

부 도시 케르발라 인근에서 도주하는 반란군에게 소이탄을 투하했을 때, 그 곳 상공을 순찰하던 미국 비행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사막의 폭풍” 작전의 최대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들이었다. 유엔 추산으로도, 한때 그리스와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가 전쟁과 경제 제재 때문에 아프리카의 말리 수준으로 전락했다. 매달 어린이 7천 명이 사망하고 1990년 이후 1백5십만 명이 죽었으며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하루 권장 열량의 34퍼센트만 섭취한다. 그러나 이런 통계 수치로도 이라크의 참상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관리는 1996년 이라크를 방문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이라크인이 4백만 명—인구의 5분의 1—이 넘는다. 그 중에는 5세 미만 아동 2백4십만 명, 임산부·빈민 여성·무의탁 노인 약 60만 명도 포함된다. … 주민의 70퍼센트는 먹을 것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짝 야윈 상태다.”

군사 전문가 릭 앳킨슨은 “사막의 폭풍” 작전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력] 충돌은 값싼 석유, 친미 왕정,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패권 국가의 등장을 막으려는 워싱턴의 전략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2003년 2월 15일에 대규모 반전 평화 행진이 있습니다.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새로운 세계 불황

크리스 하먼

《오늘의 세계 경제 : 위기와 전망》(갈무리),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책갈피), 《민족 문제의 재등장》(책갈피)의 저자

“미국은 불황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 불황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치욕하기 힘들며, 심지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0월 [2001년 10월 — 옮긴이] 비주류 경제학자 웨인 고들리는 이렇게 썼다. 고들리는 2년 전 [1999년 말 — 옮긴이] 미국 주식 시장이 어지러운 정도로 폭등했을 때 불황을 예견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지난 1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둔화’ 또는 ‘조정’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많다. … 정말이지, 세계 경제 전체가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비행기 자살 테러 전부터 위기는 시작됐다. 테러 1주일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통신 산업의 위기를 다룬 3부작 기사에서 “1조 달러나 되는 부가 날아가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고 말했다.

위기의 근본 원인

미국 경제가 침체로 나아가는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i) 정보 통신 산업 위주의 ‘신경제’는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을 바꿔 놓지 못했다. 신경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높였지만 각종 매체에서 떠들어 낸 것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폭발적인’ ‘새 시대’였던 1920년대의 더 커다란 생산 혁명이 호황을 무한정 유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제도 호황을 한없이 지속할 수는 없었다.

(ii) 호황의 진정한 추진력은 1980년대에 일본의 경쟁적인 도전에 대응해 이뤄진 대규모 산업 합리화였다. 이 합리화는 착취율의 막대한 증가와 결합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기초하고 있었다.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늘린 덕분에 미국의 지배계급은 대략 1970년대 중반의 이윤율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당시의 이윤율조차 1940년대에서 1970년대의 장기 호황기의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iii) 미국 경제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었다. 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경제의 실제 이윤 수준과 완전히 떨어졌다. 주식배당률은 지난 50년 평균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와 동시에, 자금 유입 덕분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대규모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런 흐름은 미국의 전체 소비가 전체 소득에 비해 약 6퍼센트나 초과할 때까지 계속됐다.

(iv) 호황은 두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즉, 주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것은 착취율 증대를 뜻한다. 다른 한편, 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이것은 착취율 하락을 뜻한다. 이 근본적인 사실은 몇 달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

사실,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나빴다. 이런 급격한 호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크게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

2001년의 첫 아홉 달 동안에는 모종의 호황이 유럽과 북미에서 계속됐다. 그것은 소비 호황이었지만, 핵심 산업들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이윤이 하락했다는 발표가 시작됐고, 주가는 느리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2001년 여름에는 ‘두 경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서비스와 개인 소비 부문은 여전히 호황이던 반면, 제조업과 산업 부문은 점차 침체하고 있었다.

9·11 테러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소비 거품을 터뜨렸다는 점이다. 9·11 테러가 기업들이 형편없는 이윤과 노동자 해고를 서둘러 발표할 수 있게 해준 연막이 되기도 했다. 10월 말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대기업 이사들에 따르면, 테러 공격이 기업의 비용과 [경영] 전략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는 미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믿고 있던 경기 후퇴의 효과를 보면서 대기업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많은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지난 27년 동안에 나타난 경기 후퇴를 때면 특별한 사건 탓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의 경기 후퇴는 제2차 걸프전에서 비

시장은 오르기 시작했다!

경제에서 정치로

호황에서 경기 후퇴로의 전환은 부드럽고 순조로운 하강이 결코 아니다. 호황기에는 다른 기업보다 투기에 더 열을 올리는 기업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경기가 하강하면 특히 타격을 받는 일부 산업도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겉보기에 순조로운 경기 후퇴 시기에도 대기업과 심지어 전체 산업이 갑자기 붕괴 일보직전에 몰리는 급작스런 위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양이 질로 바뀌듯이, 경제 붕괴가 갑자기 정치 격변을 초래한다. 정부는 대자본가들의 필사적인 요구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갑작스런 고통에 직면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회 전체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부각시킨다.

미국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벌써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쌍둥이 빌딩의 붕괴가 초래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렸다. 몇몇 부분은 국가 개입이라는 이 케인즈주의적 방식의 부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조처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의존하면서 생겨난 피해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적 방식들도 1990년대 말의 호황에서 발전한 미국 경제의 근본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주요 산업에서 투자는 이윤의 원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현재 이윤율의 하락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이윤율은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의 파산을 통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업원 수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해 착취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 특히 후자의 일이 항공 산업, 항공 우주 산업, 호텔 산업에서는 벌써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며, 결국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기업과 개별 소비자들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를 필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쟁과 경기 침체

미국이 전쟁에 의존한 것은 모순된 효과를 낳았다. 한편으로, 미국 군부는 특정 산업에 돈을 쏟아 부어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해 주었다. 특

릇한 유가 인상에서 비롯했다는 주장들이 자주 등장했다. 사실, 1990년과 1991년의 평균 유가는 그 전보다 높지 않았다. 유가는 한두 달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경기 침체는 몇몇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부 동역학에서 비롯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의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미국 주가 수준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미쳤다. 주식 시장이 다시 열린 첫날 다우존스 산업 평균은 684.81포인트 떨어졌다.

주식 시장 수준은 자본가 계급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소유한 주식과 기업 이사들에게 돌아가는 스톡 옵션의 현금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이들이 지배하는 체제의 동역학 면에서는 것처럼 중요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다. 신규 투자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식 시장의 주된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주식 시장은 증개 시장이다. 이 시장이 자본주의의 주된 사업—생산 현장에서 착취를 통해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일—과 맺는 관계는 중고차 증개업자와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주식 시장의 폭락은 가끔 체제 전체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나타내며, 주식 시장의 활황은 가끔 체제가 더 건강해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폭락이나 활황과 실물 경제의 호황과 불황 사이에는 자동적인 연관은 없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의 초기 단계였던 1939년부터 1942년까지 다우지수는 40 퍼센트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자본주의는 전혀 없는 대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번에도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실물 경제는 계속 후퇴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이윤 하락에 대한 보고가 잇따랐지만 미국과 영국의 주식

2002년 미국서부 지역
항만 노조 파업

히, 부시는 스타워즈 속편을 밀어붙이기가 더 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감 때문에 기업가와 소비자의 자신감이 타격을 더 크게 입을 수 있다.

전쟁은 종종 정치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이 격화돼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결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격변의 가능성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지 몇 주 만에 그들이 걱정에 빠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정부의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가한 요인이었다. 언론 논평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혁명적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공공연히 지적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을 격화시킨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한편, 경기 침체의 심화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불안정이 증대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드러난 추세들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추세는 “슬로 모션으로 돌아가는 1930년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중도파가 극우 세력이나 부활한 좌파 세력으로 양극화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초 이래 중요한 변화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이다. 이 운동은 대개 지금의 반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위기가 낳은 갑작스런 고통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제3세계의 일부에서도 “슬로 모션으로 돌아가는 1930년대”를 목격할 수 있다. 즉, 경제 위기가 심화해 낡은 정치 구조와 이에 의존하는 국가를 불안정에 빠

뜨리고 있다.

사태가 얼마나 악화할 수 있는지는 아르헨티나가 9월 11일 훨씬 전부터 보여 주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년 간의 경기 침체 뒤에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다가 올 봄에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경제 장관직을 도밍고 까바요에게 맡기면서 시간을 벌었다. 까바요는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해 교체된 정부에서도 경제 장관을 지낸 바 있었다. 그는 잠시나마 언론으로부터 아르헨티나의 구세주라는 칭송을 받았다. 여름에 그는 IMF 차관 80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훨씬 더 가혹한 삭감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는 계속 추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10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이 백지 투표를 했으며, 야당인 페론주의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유권자의 4분의 1은 다양한 극좌 정당을 지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폐소화 평가절하와 일부 외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긴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폐소화 평가절하와 채무 불이행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약간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제적으로 파괴적인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준 은행들(주로 미국계 은행들)에 피해를 입힐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은행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해 그 나라들을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터키는 1년 동안 아르헨티나와 쌍벽을 이루면서 국제 금융가들을 걱정스럽게 만든 나라였다. 이집트는 10년 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을 후원한 대가로 외채를 일부 청산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외채를 안고 있다. 파키스탄의 외채 부담액은 3백70억 달러나 되지만 지금까지 제공된 구제 금융은 미미한 액수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 수입의 60퍼센트 이상이 외채 이자로 지급된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채무 재조정을 거치더라도 그 수치는 50퍼센트로 줄어들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수출은 미국·일본·유럽 경제의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불만이 거리에서 폭발해 정부 전복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만은 아니게 됐다.

전 세계 지배계급의 변호론자들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호황기의 과도함을 '바로잡아' 줄 것이며, 재

빠른 군사적 승리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예측 정권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매우 운이 좋은 편이다. 그들의 경제가 도처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지금, 가연성 물질로 가득 찬 지역에서는 부시와 블레어가 시작한 전쟁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2003년 세계사회포럼

세계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세계 운동의 거대한 집결

2003. 1. 23~28 브라질 포르투알레 그레
www.foursocialmundial.org.br

차베스에 대한 도전

크리스 하먼

지난 주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지난 4월의 쿠데타 기도는 차베스 대통령을 겨우 3일간 몰아냈을 뿐이다.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에게 대통령을 복권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쿠데타 기도에 서도, 차베스 반대파들은 스스로 ‘파업’이라 부르는 방법을 동원했다. 사실, 이 방법은 기업주들의 단체인 ‘페데카메라스’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사보타지하는 것이었다. 또, 이것은 주요 노조연맹인 베네수엘라 노총(CTV)의 우파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시도는 10월 초에 몇몇 퇴역 장군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라고 군대에 호소한 뒤에 나온 것이었다. 그 뒤로 이들 퇴역 장군들은 수도의 가장 사치스러운 지역에 있는 값비싼 호텔에 들어앉았다. 호텔 바깥 광장에서는 이들의 지지자들이 벌이는 시위가 지속됐다.

차베스 반대파가 ‘파업’이라고 부른 것의 계급적 성격은 지난 주에도 드러났다. 반정부 신문인 <엘 유니베르살>은 카라카스가 마치 서로 다른 두 도시로 나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반정부 세력의 사보타지는 부유한 동쪽 지역에서는 완전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가난한 서쪽 지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많은 상점 주인들이 문을 닫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버스와 지하철을 운행했고 은행들도 대부분 영업을 지속했다.

주말에 <울티마스 노티시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영업 중단 자체는 정부를 사임시킬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부나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반대파들은 지난 금요일 사건을 이용해 이러한 지원을 얻으려 했다. 10월부터 시위가 계속 벌어진 호텔 앞 광장에서 지난 금요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네 명이 사망했다. 반대파들은 즉각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 뒤 이틀 동안 반대파 지도자들은 석유회사 관리자들, 기술자들, 경영진에게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설득했다. 월요일에 전국의 주유소에서는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도 위협받게 됐다.

차베스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상층계급의 시도를 “계급 투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한 그의 대응책은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만 의지하는 것이었다.

4월 쿠데타 시도 뒤, 그는 계속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국민 화합”을 요구했다. 미국이 쿠데타를 일부 지원했는데도, 그는 미국 정부에 석유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차베스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그의 정부 재정은 정부 서비스 삭감이라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삭감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너스 지급이 취소됐다.

이 덕분에 부패한 우파 노조 지도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이 고용주들과 연합해서 차베스 정부에 반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 두 달 전에 차베스 정부는 만약 기업주들이 또 한 번 사보타지를 시도하면 자신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을 장악하라고 호소할 것이며, 기업주 없이 산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위기에 직면해서, 그의 주요한 대응은 군부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선장들이 유조선 운항을 거부하자 그는 군을 출동시켜 유조선들을 장악했다.

이것은 이중으로 위험한 방법이다. 이것은 그가 점차 군 장교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유층 출신인 그들은 하루아침에 반대파 지지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군대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부패한 노조 지도자들은 그를 대중을 억압하는 독재자로 색칠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이런 식으로 우파 노조 지도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이 고용주 단체와 같은 편에서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 차베스 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 상층 계급의 혐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 행동과 “화합” 논의가 뒤섞인 차베스 정부의 대응 앞에 쉽사리 무릎 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차베스가 물러나기를 원한다. 그의 좌파적 미사여구와 빈민층 지지 기반 때문에 미국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약 15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쿠데타가 실패한 뒤 조지 W 부시 정부는 공개적으로 차베스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중단했다.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내전이 발발해서 석유 공급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상층 계급이 석유 공급을 보장해 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남미 전역에서 좌경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 지도자 룰라가, 에콰도르에서는 좌파 군 장교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지난 12월 20일은 IMF 정책을 강요하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중 봉기로 타도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럴 때 베네수엘라가 급격하게 우경화하는 것보다 미국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경화할 것인가?

에릭 루더
미국 좌파저널리스트

지난 10월 말 이스라엘 노동당이 총리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연정에서 탈퇴해 샤론은 내년 1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2003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 끝에 노동당과 샤론의 우파 리쿠드당으로 이뤄진 “국민 통합” 정부가 무너졌다. 그 예산안은 점령지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1억 4천7백만 달러(약 1천7백70억 원)를 배정한 것이었다. 5백70억 달러(약 68조 6천2백80억 원)의 예산안에는 18억 달러(약 2조 1천6백72억 원)를 삭감해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빈민들을 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던 저임금 직종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노동당이 연정에서 뛰쳐나간 것은 빈민과 노동 계급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당은 리쿠드당 지지표를 빼앗아 오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 여론 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리쿠드당 의석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노동당은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스라엘인들이 “아랍인들의 일”—이스라엘에서 비숙련직이라고 부르는—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종 차별적 분노에 호소하면서도,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정착민들을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기게 됐으며 정착민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이 이스라엘의 거액의 군비 지출—지난 열 달 동안에만 85억 달러(약 10조 2천3백40억 원)였다—에 도전할 것이라고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군비 지출은 요르단강 서안 지방과 가자 지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정착민들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추방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샤론은 이달 말 리쿠드당 당수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타냐후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뒤 샤론이 네타냐후를 물리치고 당수가 됐다. — 옮긴이] 전에 총리를 지낸 네타냐후는 아라파트를 “추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일급 전범 샤론조차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너무 무르다”고 주장하는 자다. 사실, 샤론 정부는 팔레스타인 마을들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고 요르단강 서안 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무제한 통행 금지를 실시했다.

평화 정당을 자처하는 노동당은 샤론 정부의 이런 잔혹 행위들을 덮어 주는 외회 노릇을 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잔혹 행위들을 기획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당 당수 베냐민 벤-엘리에젤은 지난 주까지도 샤론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벤-엘리에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저항을 모두 분쇄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을 살해했다.

그 충돌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하비에르 수니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죄는 누군가를 불필요하게 사살한 병사에게서 옮겨가 명령을 내리거나 묵과하거나 은폐한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 최고위 당국자들에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우경화하는 이스라엘 정부가 아라파트를 추방하거나 살해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과 중동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 이라크 전쟁 물의를 빚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의 중동 특사 윌리엄 번즈는 2005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평화 협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알 아람 위클리>의 조너선 쿡은 다음과 같이 썼다. “번즈가 싸구려 가짜 약을 판매하려 한다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다. 그 복안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향한 길고 고통스런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미국이 이라크와 벌이려는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 복안은 전에 미국이 후원한 “평화”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복안이 약속하는 미래는 이스라엘 정착촌은 계속 확대되고 해마다 50억 달러(약 6조 2백억 원)나 되는 미국의 대 이스라엘 재정 지원도 지속되는 반면, 팔레스타인 사회는 해체되는 그런 미래다. 미국의 지원은 리쿠드당의 인종 청소라는 살벌한 강령과 노동당의 더 친절하고 온건한 식민주의 둘 다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가 들어서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정부의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 의 허구성

정진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화센터 실장

2002년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었다.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임금 체불, 산업재해, 폭행, 강제 추방 등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무시한 채 편법적인 방안만 제시해 왔다. 특히, 2002년에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외국 인력 개선 방안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외국 인력 대책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방안' 이후 최근 발표한 "외국 인력 제도 보완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해 이주 노

동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현실과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대책없는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2002년 3월 25일부터 정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이주 노동자들은 200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비록, 사업주의 보장—자진 신고가 미진하자 그 뒤 사업주의 보장 없이도 자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이 필요하고 체류 자격에 한계가 있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굴레가 주는 힘겨움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98.2퍼센트인 25만 5천9백78명이 신고했다.

2003년 3월까지 정부가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전과 다르게 활기가 넘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불법체류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상담소를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1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 인력 개선 대책' (이하 7·18 대책)은 이주 노동자들이 가진 일말의 기대를 짓밟았다. 정부의 기만적인 외국 인력 대책 발표와 집중 단속, 강제 추방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외국 인력 개선 대책'을 발표하자 이주 노동자 상담소와 사회 단체들은 공대위를 구성해 기만적인 정부 정책의 철회, 연수제도 철폐, 강제추방 반대 등을 위한 농성을 전개했다. 언론도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비판했다.

정부의 기만적인 외국 인력 대책에 맞서 상담소마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강제 추방의 부당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만난 이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주장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했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후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이주 노동 운동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9월의 종묘 집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 발언이 계속 진행됐다. 이전과 달리 강한 어조로 정부 정책의 부당성과 강제 추방 반대를 분명히했다.

또다시 대책 없는 '외국인력 제도보완 대책'

산업연수제도 확대와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이 핵심인 7·18 대책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11월 '외국인력 제도 보완 대책'(이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 7·18 발표한 외국인력 제도 개선 대책 중 일부 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 내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 전원 강제출국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일시에 많은 외국 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중기협 등 연수생 관리기관이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귀속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여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 발생”

이것은 정부 스스로 몇 개월만에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강제 추방 정책과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보완 대책의 검토 배경이지만 실질 내용은 하나도 보완된 것이 없는 임시방편이다.

보완 대책에서 말한 강제 추방 대상은 체류 기간 3년 미만자로 최대 1년의 재유에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는 대규모 단속을 통해 전원 추방한다고 한다. 현실적인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선택한 보완 대책이 이처럼 1년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단순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국 재유예라는 방침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 강제 추방에 따른 갑작스런 인력 공백을 우려해서다. 또, 출국 재유예를 통해 산업연수생 도입을 더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정부는 보완대책에서 일시 출국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2003년 1월까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 명을 조기 도입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추가로 2만 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농·축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도 각각 5천 명의 연수생을 2003년 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재외동포 2만 5천 명을 도입하고, 불법체류자 출국 상황에 따라 추가로 2만 5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완 대책은 검토 배경에서 다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문제라고 자인한 연수제도를 확대·강화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현재 그리고 암울한 미래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외국인력 정책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만이 '노동허가제' 도입이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의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위안을 삼고 있다.

외국인력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힘겨움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근본 해결 방안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온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 노동자 사면을 애써 외면하면서 진행되는 정부 정책은 결국 파행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암울할 뿐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강제 추방과 기만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다. 다시금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보고 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 그 작은 위안이 커다란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암울한 미래를 헤쳐 나갈 준비를 한다. 

석유를 위한 전쟁의 희생자들

미국의 이라크 전쟁

노엄 촘스키 · 하워드 진 지음, 앤서니 아노브 역음 북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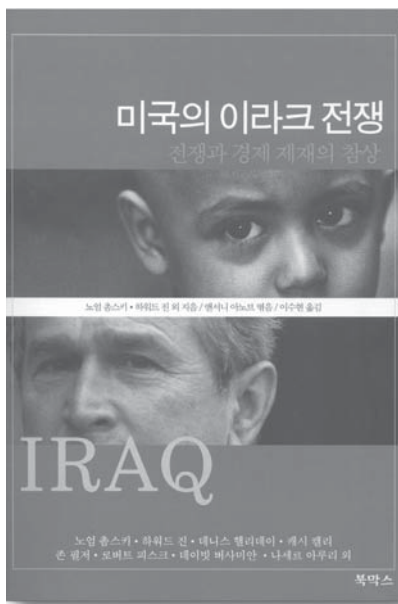
1999년 한 해에만 미국과 영국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라크에 1천8백 개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끔찍한 전쟁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과 경제 제재 때문에 1백만 명 넘는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다. 그 중 60만 명이 어린이들이었으며, 한때 그리스와 어깨를 견주던 나라가 이제는 “석기 시대”처럼 황폐해졌다. 끊임없는 공습은 전력망 · 운송망 · 상하수도 등을 파괴했고, 그 결과 콜레라 · 장티푸스와 다른 끔찍한 질병들이 널리 퍼졌다. 병원 ·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등이 사라졌다. 약 3백 톤의 열화우라늄탄이 식수와 작물, 사람들을 오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형아와 암 발생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한때 중동에서 부러움을 산 이라크의 경제 · 농업 · 공업 · 보건 의료 · 교육 체계는 경제 제재 때문에 파괴됐다. 의사와 교사들은 장비 부족으로 거의 아무 일도 못 해 한 달에 3달러(약 3만 5천9백60원)도 못 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택시를 몰거나 노점에서 담배를 팔아 부수입을 올리지만 그래도 먹고살기는 힘들다. 반입이 허용된 의약품도 운반 · 보관 ·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필수 장비들의 반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파괴되지 않은 학교에는 책상이나 책, 난방 · 조명 시설도 없다. 미국은 심지어 연필조차 수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혹은 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 이라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빈곤과 실업과 절망에 빠져 있다. 대규모 기아 사태를 막아 주는 유일한 버팀목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 제도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은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이라크

가 연간 1백억 달러(약 12조 3백20억 원) 어치까지 석유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석유 수출 대금의 약 30퍼센트는 전쟁 배상금으로 유엔이 가져간다(쿠웨이트를 ‘해방’시킨 비용에 대한 보상). 또, 5~10퍼센트는 유엔 무기사찰단으로 활동하는 미국 스파이 활동비를 포함해 유엔 경비를 지불하는 데 들어간다.



이라크 국민 2천2백만 명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참상들을 도대체 무엇이 정당화할 수 있을까? 미국과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목표가 사악한 독재자로부터 이라크를 해방시키고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지 못한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독재자가 자국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독가스를 사용했을 때도 이 독재자를 무장시키고 후원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1991년 걸프전이 끝난 뒤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후세인이 이들을 진압하는 것을 묵인했다. 이 봉기는 독재자를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나토 동맹국 터키가 서방이 보호하던 쿠르드족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라

크 북부의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포위 상태는 독재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심지어 유엔 사찰단원들조차 그런 무기들이 파괴된 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이라크를 포위하는 진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석유다.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2위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이라크는 인구도 많고 오래 전부터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대중적 열망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는 이 지역을 미국이 계속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람 후세인과 이라크 국민 전체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

이 책에 실린 훌륭한 글들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고무적이기도 하다. 지난 12년 사이에 이라크를 방문한 많은 필자들은 매우 끔찍한 대량 학살을 그려내고 있다. 모든 필자는 사람 후세인에 대한 반대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단결해 있다. 필자들 중 몇몇은 용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이라크에 대한 의약품 반입 금지를 끝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황야의 목소리”라는 단체, 34년 동안 유엔에서 충실하게 근무하다가 경제 제재에 항의하며 사임한 이라크 주재 전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 테니스 헬러데이, 진실을 검증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시류를 거스르는 존 필저, 노엄 촘스키, 로버트 피스크 같은 언론인들이다.

필자들은 대량 학살을 끝장낼 수 있는 운동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펴 왔다. 이 책은 이런 운동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테러리즘의 문화

노암 촘스키 이룸

1986년 10월 니카라과 정부군은 콘트라 반군이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미국

기간 항공 화물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한 달 뒤 레바논의 한 신문이 미국산 무기의 이란 유출을 폭로했다. 이것이 '적성국가'인 이란에게 무기를 판매한 돈으로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이른바 "이란-콘트라 게이트"의 시작이다.

이 책은 니카라과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란-콘트라 게이트"를 중심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국제 테러리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테러리즘의 문화", 즉 언론이 권력에 순종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미국의 선량한 의도'라는 엘리트의 내면화된 교리, 국무부 대중외교국의 역할과 이들을 통한 진정한 진실이 가려지게 만드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진실 작전"의 기만을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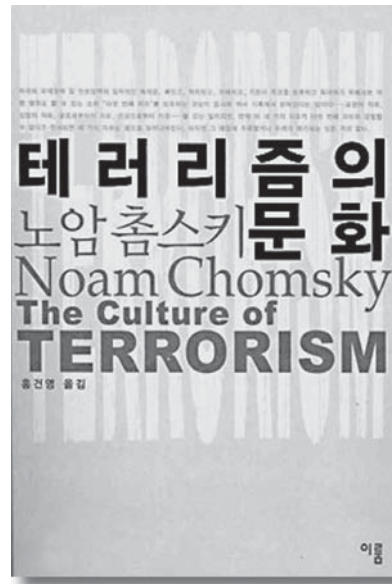
1979년 니카라과에서 친미 소모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에는 관심도 없던 미국은 "니카라과 민주주의의 구상"을 말하며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다. 이것을 두고 촘스키는 "니카라과의 인민들은 산디니스타 정부의 자국 자원을 가난한 다수를 위해 사용코자 한 범죄적 시도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디니스타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지만, 자선 개발 기구 옥스팜도 인정했듯이, 식량 자급·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산디니스타가 추진하는 사회 개혁을 파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 목표'를 설정했다. 보건소, 학교와 같은 "부드러운 목표"를 공격해서 60곳 이상의 보건소를 파괴해 의료 상태와 복지 수준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또, 촘스키는 "니카라과는 분쟁이 발발한 이후 외교적 해결의 길을 추구했지만, 미국은 평화적 해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도를 다 강구했다." 하고 말한다. 평화협정이 파기된 책임을 산디니스타 정부에 돌린 미국 정부와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 얼마 전 '북한의 제네바 협정 파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금,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촘스키의 분석은 유익하게 다가온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조인하지 못하게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가 하면, 협정을 체결해도 1973년 파리협정에서 그랬듯이 협정 이후 모든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콘트라 반군을 계속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 촘스키는 "미국에서는 니카라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기록과 비교해서 제시되는 법은 없다." 하고 말한다. 현재 대륙문 제위원회는 엘살바도르와 함께 과테말라를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으로 규정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7년 1~5월 사이 14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암살당하고 1백여 명 이상이 실종됐다. 과테말라 군부의 "검열의 일차적 방식은 살인"이다. 1987년 이래 매일 1백여 명 이상 실종되고 사망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레이건 독트린 이후 모두 미국의 지원에



의해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지만 미국에 이들 나라는 "초보 민주 국가들"일 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뉴 리퍼블릭>은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실제 모델"은 엘살바도르라고 알려 준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니카라과의 어떤 신문사 폐간 조치나 계엄 발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들이대며 광분한다.

여기에서 "자유"란 "다섯번째 자유"이며 (촘스키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4대 자유에 이어 "빼앗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기존의 특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 다섯번째 자유야말로 다른 네 가지 자유에 선행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유라고 한다), 미국 지배 계급과 친미 국가의 자본가들에게 걸맞는 "민주주의"다. '자유'의 투사' 콘트라 반군의 지도부는 니카라과의 기업가와 지주 계층을 대표한다. 알폰소 로베로는 목화 재배업자이자 식용유 가공업자, 민영기업상급위원회 회장이었고, 아리스티데스 산체스는 지주이다. 또, 촘스키는 미국의 '적성국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두고도 (미국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친미적인 사 정권이 무너지자 "이란의 피노체트를 발견하기를 원했"(ABS 중동 통신원의 말을 인용해서)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란-콘트라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의 '초보 민주 국가들'에서 저지른 일들과 198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의 콘트라 반군 지원에 내린 국제사법재판소의 유죄 선고를 무시한 것은 의회나 언론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기껏해야 절차상의 문제나 개인의 책임으로 마무리지어졌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니카라과의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는 고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콘트라 반군은 미국의 "선량한 의도"를 관찰시키기에 적당하지 못한 도구이며, 니카라과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선량한 의도가 미치지 않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표현에 따르면, "레이건은 '고상한 이상주의'에 대해 약간의 '현실주의'를 보태야 한다." 이런 피해 방지 조치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선량한 의도-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이 쓰여진 1987년에 촘스키는 "테러리즘의 문화"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한다. 그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일까? 작년 9·11 사태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의 "선량한 의도"에 대해 커다란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의 거대한 반전 운동이다. 이러한 대중 운동이야말로 “테러리즘의 문화”를 바꾸고 미국의 “국제 테러리즘”에 맞설 수 있는 단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원

츨스키와 세계화 제레미 폭스, 이제아복스

제레미 폭스가 “근대 언어학의 아인슈타인”, “반체제주의자”,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는 츨스키는 40년이 넘도록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반민주성”을 폭로해 왔다. 《츨스키와 세계화》의 저자 제레미 폭스는 1994년 이후 출판된 츨스키의 책·대담·강연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세계화가 좀더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로 세상을 안내할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도 그럴것이 국제기구 — IMF · WTO · 세계은행 — 와 다국적 기업들은 경제를 개방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선전, 개발 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무역 자유화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선전을 끊임없이 언론에 내보낸다. 츨스키는 이것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기업적 대중 선전의 성장”이라고 말한다.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시장에 대한 반감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장 예찬론자들은 자유무역을 보호하려고 부단히 애쓴다. “IMF는 자신들의 성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많은 수의 ‘학술적인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수가 IMF에 대한 대안적인 연구들을 압도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현실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 인구의 30퍼센트가 빈곤에 처해 있다. 제레미 폭스가 지적하듯이 “세계화는 전체 인구 대부분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유한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어떤 개선의 가망도 없어 보인다. 지난 25년간 노동시간

과 노동 불안정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이론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부를 지키기 위한 고집스런 처방들의 집합일 따름이다.”

이 책은 언론이 말하지 않은 진실을 수없이 많이 보여 준다. 자유무역이 전혀 긍정하지 않다는 사실, 즉 자유무역은 “자신들의 산업과 상품을 오랫동안 충분히 보호해 온 세계의 주도국들에 의해 가난한 국가들에 부과”된다. 1997년에 OECD 집계



를 보면, 미국 정부가 비군사적 연구 조사와 개발에 지원한 돈이 “모든 민간 연구조사 지출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신자유주의는 왜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가? 세계 경제 활동의 70퍼센트가 투기인 상황에서 정부 규제의 최소화는 “이윤 수준을 증가시키고 투기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왜 사기업화를 강요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고, 조세 수준을 낮추고, 사기업들에게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지출의 축소는 민간 부문에 있는 학교, 병원, 수송체계 등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서비스와 주식 둘 다를 살 수 있는 부유한 국민들을 만족시킨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유층에게 기여하도록 고안된 체계이다.”

정부와 기업가와 언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을 위한 희생을 요구한다. 제레미 폭스는 세계화론자들의 이런 주장이 “노동인구의 불안감을 유지시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옳게 지적한다. “달라진 건 없다. 현재까지 세계화의 영향은 이윤을 상승시키고, 기업 조직을 강화하고, 노동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체제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평등의 증가를 통해 더욱 극단적인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츨스키와 세계화》는 얇은 책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찬양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이 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주의자들의 허점을 명쾌하게 반박한 이 책은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김덕엽

수탈된 대지 — 라틴아메리카 5백년사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범우사

“라틴아메리카는 석유, 금, 은, 구리 등 광물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1억 2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풍의 눈 속에 던져져 있다. 1분마다 한 명 꼴로 아이들이 병 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1971년 당시 라틴아메리카인 2억 8천만 명 중 5천만 명이 실업자나 잠재 실업자였고, 거의 1억 명이 문맹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절반은 비위생적인 주택에서 초만원의 이룬 채 생활하고 있다.

1968년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대로 “매년 파테말라에서 사망하는 7만 명 가운데 3만 명은 아이들이다. 파테말라의 아동 사망률은 미국의 40배”라고 한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된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5백년 동안 선진국이 저지른 수탈의 역사를 생생하게 폭로함으

로써 의문의 안개를 시원스럽게 벗겨주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유럽인들은 인디오들에게 채찍과 복음서를 자주 이용했고,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사용했다. 유럽인들은 천연두, 파상풍, 다양한 폐와 창자 질환을 갖고 들어왔다. 인디오들은 파리처럼 죽어갔다. 그들의 몸은 새로운 질병에 무방비 상태였다.

브라질의 인류학자인 다르시 리베이로는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 밖의 태평양 여러 섬의 토착민 절반 이상이 백인과의 최초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죽었다"고 추정했다. 살아남은 인디오들은 짐 운반용 가축으로 취급당했다. "사람은 노새보다 싸다"는 말이 자주 사용됐다.

어디 그뿐인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플랜테이션 농업에는 인디오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도 필요했다. 브라질 정복에서 노예제 폐지까지 아프리카에서 끌고온 흑인 노예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세르히오 바구는 "유럽 중상주의 자본 축적의 최대 원동력은 아메리카의 노예제"였다고 밝혔다.

저자는 원주민 공동체를 강탈해 세워진 플랜테이션 농업은 인디오의 시체실이 됐고, 흑인 노예들로 이뤄진 죽음의 밭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확대는 기아의 급증을 낳았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수출용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나 콩 등 자신들이 먹을 농작물 생산을 줄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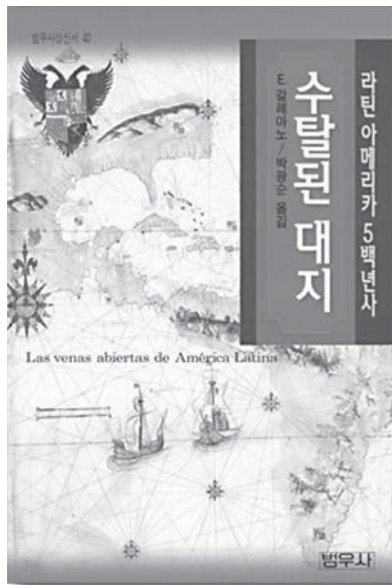
사탕수수·커피·카카오 등 플랜테이션의 풍요와 번영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한 유럽과 미국 지배자들의 배만 살찌웠을 뿐이다.

또, 사탕수수나 커피 같은 단일 농작물에 매달린 경제 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주민 대부분을 끝없는 궁핍으로 내몰았다. 모노컬처(단작 재배) 방식의 농업은 외국 은행가들의 수지 타산에 좌우되고, 국제 시세 변동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 시세 변동을 '간질병의 임상표'에 비유했다. 기계류나 공업 제품에 비해 단일 농작물의 거래 가격이 항상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종속 이론의 관점에서 글을 쓰다 보니 잘못된 지적도 눈에 띈다.

"선진국의 공산품과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의 부등가 교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기아 임금은 미국 및 유럽의 고임금에 응자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 사실상 부등가 교환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자본가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선진국의 번영은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의 강화"라는 주장도 일면만 맞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성장은 저발전의 발전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자가 미국과 IMF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폭로한 점은 적절하다.

제2차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투입된 외국 자본은 주로 미국 자본이었는데, 국가 보증 차관 방식으로 지원한 원조는 각 국가의 외채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1975년 라틴아메리카의 대외 채무는 1969년의 거의 3배였다. 1980년대가 되면 해외 차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하고, 그 동안 은폐돼 온 외채 위기가 라틴

아메리카를 엄습하게 된다.

저자는 "IMF 처방전은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대신 악화시키는 정책을 라틴아메리카에 강요하고 있다. ...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 신용을 극단적으로 압축하도록 강요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국가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 치료법은 차관 및 투자라는 약제를 강요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IMF가 내린 처방전은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이다. 비록 이 책이 1971년에 씌어졌지만,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서의 사회적 격변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많은 도움을 준다.

김현옥

자원의 지배 마이클 클레이 세종연구원

인류는 21세기 벽두를 전쟁의 시대로 규정할 것이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이라크 공격을 서두르고 있다. 또 북한을 계속 압박해 끊임없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핵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클레이는 21세기의 전쟁 양상은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하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자원 전쟁(Resource War: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하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는 자원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간·국가 내부의 분쟁들을 소개한다.

자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역시 중동, 즉 페르시아 만이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가 세계에서 많이 매장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 국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역

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받을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예측대로라면, 세계 각국이 페르시아 만에서 공급받는 석유는 1997년 하루 1천6백30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3천6백40만 배럴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분쟁의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1991년 이라크 침공 이래 미국은 자국 군대들이 지역에 주둔시키는 한편, 이라크, 수단 같은 국가들을 끊임없이 폭격해 왔다.

1970년대에 베트남 후유증을 앓던 미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내세워 이 지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위임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미 팔레비 왕조가 퇴진하자 미국은 직접 책임을 떠맡아야 했다. 1980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 카터는 연두 교서에서 페르시아 만을 미국의 “필수적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다. 이 카터 독트린이 실제 효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199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휘한 “사막의 폭풍 작전”, 즉 2차 걸프전이었다.

저자의 관점대로라면 오늘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지 부시의 의도 역시 명쾌하게 읽을 수 있다. 1991년 <비즈니스 위크>가 지적한 대로 “석유는 전쟁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저자는 카스피 해로 시선을 옮긴다. 저자는 이 지역을 “석유의 새로운 엘도라도[전설 속의 황금 도시]”라고 부른다. 1997년 미국 국무부는 카스피 해역의 에너지는 북해에서 발견되는 양의 약 10배에 달하고, 페르시아 만 총 매장량의 3분의 1인 2천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지역에 매장된 에너지가 이목을 끄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인 반면, 이 지역의 생산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냉전 해체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 매장된 에너지에 군침을 흘리며 군사적·정치적 개입을 추진해 왔다. 클린턴은 이 지역 대통령들과 회담을 한 뒤 미군과 이 지역 국가들의 군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CENTRAZBAT)을 실시했다. 옛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 지역의 국가들—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친 서방 노선을 채택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이 지역을 텃밭으로 여기던 러시아의 그림자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는 없었



으나, 경제·군비 지원이나 합동 군사 훈련 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에 개입을 늘려 왔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체첸 침공이다. 얼마 전 발생한 모스크바 인질극 사태와 이후 푸틴의 공격 강화에서 보듯 앞으로도 체첸에 대한 무력 개입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저자는 2000년 이 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그 뒤 카스피해에서 전개된 세력 양상을 다룰 수 없었다. 미국은 작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이 지역에 전초 기지를 마련했다. 하미드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는 철저히 미국에 봉사하

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추진했다가 실패한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대 테러전을 지원한 대가로 체첸 침공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었다.

페르시아 만과 카스피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은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995년 중국이 몰래 스프래틀리 군도의 산호도를 점령한 이후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저자는 나일강을 둘러싸고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벌이는 분쟁을 소개한다. 또 이 지역의 맹주 이집트가 횡포를 부리는 모습도 보여 준다. 요르단강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횡포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과 골란 고원을 점령해 부족한 수자원을 독차지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물을 거의 공급하지 않아 반감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둘러싼 터키·이라크·시리아의 갈등, 인더스강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목재와 광물을 둘러싸고 아프리카에서 벌어져 온 끔찍한 내전의 역사를 접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간 분쟁의 핵심 원인을 자원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그러나 경쟁과 약육강식이 법칙인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사라질 수 없다. 중동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지금, 이 책은 자원을 둘러싸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추악한 경쟁을 폭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가 국제 분쟁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 기구들에 기대를 걸 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유념하고 읽어야 한다.

한상원

12호(2002.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
- 공무원 연가 파업
- 보호감호제도 폐지되어야
- 영국 전쟁저지연합에서 배운다
- 이회창과 맞서 싸울 수 없는가
- 반이회창 운동을 지지해야
- 사회당의 희비극
-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하는 투표의 의미
- 북한 핵 논란
-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의 그 불만> 서평
- 체첸
- 브라질 PT의 선거 승리
- 터키 총선 결과
- 유럽사회포럼

19호(2002.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
- 공무원 연가 파업
- 보호감호제도 폐지되어야
- 영국 전쟁저지연합에서 배운다
- 이회창과 맞서 싸울 수 없는가
- 반이회창 운동을 지지해야
- 사회당의 희비극
-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하는 투표의 의미
- 북한 핵 논란
-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의 그 불만> 서평
- 체첸
- 브라질 PT의 선거 승리
- 터키 총선 결과
- 유럽사회포럼

18호(2002.11)

- 미국정부 각료 폭로
- 미국의 반전 운동
- 반전 운동의 성공을 위한 주장
- 유엔의 추악한 역사
- 브라질 대선 결과
- 민주노동당 선거 강령
- 사회당 / 개혁통합 노동연대/개혁당 비판
- 독일총선 결과

17호(2002.10)

- 부시의 이라크전쟁
- 후세인은 누구인가
- 마흐메트 평전
- 한총련의 반이회창운동
- 조·일 정상회담
- 분단의 정치와 노동자운동
- 문부식 비판
- 인민전선
- 석유와 서방 제국주의

16호(2002.9)

- 남한 지배자들의 친미주의
-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
- 9·11주년
- 이윤 물이이회창당하는 지구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논쟁
- 농민은누구인가
- 북한의시장 개혁
- 브라질경제 위기

14호(2002.7)

- 서총련 투표 전술 비판
- 북한 난민
- 이주 노동자
-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인도-파키스탄
- 반란의 아르헨티나

15호(2002.8)

-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
-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 미국 경제는 추락하는가?
- 플랜 콜롬비아
- 서해교전
-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
- 세계사회포럼
- 아르헨티나

13호(2002.6)

- 프랑스 대선
- 반파시즘 투쟁
- 트로츠키는 누구였는가
- 월드컵 제대로 보기
-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12호(2002.5)

- 발전파업의 교훈
- 진중권 비판
- 에이즈
- 베네수엘라
- 이탈리아 총파업
- 중국노동자투쟁
- 프랑스 대선

11호(2002.4)

- 손석춘 강연
- 누가해 미치광이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인가
- 철도파업 평가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분쟁'
- 이탈리아 노동자투쟁

10호(2002.3)

- 미국제국주의의 모순
- 피에르 부르디외의 조사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노동자
- 포르투갈레그레
- 엘른스칸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저항
- 빅토르 위고

9호(2002.2)

- 아르헨티나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권영길의 2002년 선거 전망
- 주5일 근무제
- 정성진의 경제 전망

8호(2002.1)

- 아프가니스탄 여성
- 보신탕 논란
- 인간배아 복제
- 백색공포?
- 스포츠
- 강준만 논쟁
- 브뤼셀 EU정상회담

7호(2001.12)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인/에드워드 사이드
- 오늘의제국주의와전쟁
- 노무현 비판
- 수전조지의 WTO비판
- 마약합법화
- 안락사 · 낙태 · 대리모

6호(2001.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 의반전 성명서
- 유엔
- 이슬람
- 유대 시오니즘의본질

5호(2001.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전쟁
- 김수환 교수 강연

4호(2001.9)

- 제노바 G8회담 반대시위
- 가톨릭 급진 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매가와 티의 불안한 앞날

3호(2001.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민주노동당 창당파업 평가
- 지구 은전화와 자본주의
- '8·15민족 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매춘 합법화

2호(2001.7)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6·15선언 1년을 돌아보다
- 새남금 간척 사업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 계급

1호(2001.5)

- 미친스타 워즈 계획
- 부시의 환형 파괴
- 미스코리아추천
- 경찰의 폭력
- 일본



2003
겨울 다함께

변혁인가_

야 만 인 가.

기간 1월 15일-1월 19일
장소 고려대학교
참가비 하루 5,000원
전일 18,000원
주최 다함께
참가신청 Tel 02-3295-4773 / Fax 02-968-5907
E-mail altforum2003@intizen.com
Homepage <http://www.altforum2003.org>

알렉스 캘리니코프 / 권영길 / 박노자 / 홍세화 / 손석준 / 홍근수 / 김형택 등
22명의 연사가 24개 주제에 관해 강연합니다.

